

1999년 10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 의사진행의 건 20
-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22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박상천·이부영·이금규 의원 외 288인 제출) 49
 - 휴회의 건(의장 제의) 49
-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49

(14시06분 개의)

○**의장 박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주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시09분)

○**의장 박준규** 그동안 약 2일간에 걸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대과 없이 수습되어서 오늘 예정대로 의사일정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경제 질문에 관해서 빠진 의제는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하도록 지금 각 당 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열세 분 의원이 질문을 모두 하신 다음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관행이 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 죽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기 발언대기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다음에 질의하실 분은 표결사의 안내로 5분 전에 미리 와서 앉아 계셔 주시면 국제관례에 맞는 의사진행이지 싶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부 측 답변에서 총리께서 자상한 답변이 많으시기 때문에 총리가 답변하신 부분은 각부 장관이 설혹 답변하실 일이 있더라도 중복되는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함께 답변하시는 것이 무방합니다. 일부러 일일이 양해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먼저 전남 함평·영광 출신이신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의원** 새정치국민회의의 김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애 수고가 많으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50년 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의 탁월한 지도력과 확고한 개혁의지의 실천으로 그토록

암울했던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세력의 명분 없는 파괴적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위중했던 부도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희망찬 재진군의 나팔 소리를 힘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8개월 동안 민주정권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권의 도덕성을 확보하였고 경제성장 기조의 회복, 외환보유고 확충, 물가 및 금리안정, 경상수지의 흑자달성 등 각종 경제지표가 말해 주듯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고 대북우위의 안보체제를 실증하고 정상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 어느 정부도 성취하지 못했던 현 정부의 치적에 대해서 정당한 국민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운영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함께 경제·외교·안보분야의 성과에 비해서 사회분야의 개혁추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특히 교육분야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문제, 재해대책 등에 있어서의 정부의 준비미흡과 정책혼선이 가져온 결과이며 아울러 아직도 나라를 망쳐 먹은 사고방식으로 습관성 국정 방해 행위를 일삼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삼아 온갖 악선전과 사실왜곡으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정치세력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국가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이 실패하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교육·사회분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맞이해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에 민족의 정통성 확립도 못 한 채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이 나라에는 비극이 연속되었습니다. 해방 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으려는 정치세력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정의에 대한 표준감각이 상실되었으며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애국선열들의 후손들은 삭월세방으로 전전하고 있고 매국노와 그 후손들은 지금도 누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 현재 정부부처 중 법령이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킨 부처가 단 한 곳도 없고 일반 기업체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실태와 시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자녀의 대학특례입학이 형식과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특례대상 또한 손자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그 해당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증손까지로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농어촌 상수도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 농어촌은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 막대한 농어가 부채,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벼랑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농약과 축산폐수, 심지어 방사성 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실로 생존권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에 상수원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대 정부는 팔당댐처럼 상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지역 상수원개발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 주고 돈이 없어서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농어촌 지역의 상수원개발은 국비지원 없이 지방채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돈 있는 사람들의 식수는 국가에서 해결해 주고 돈이 없어서 애잔한 농어민의 식수는 그들의 빚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이자율 3.5%의 환특용자와 지방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을 서민들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당분간 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무이자 용자라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핵연료세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인 원전건설이 해당 지역주민의 극단적인 반대로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성 시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와 함께 주민기피시설 유치에 따른 반대급부 미흡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 경북, 전남도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핵연료 중량가액의 100분의 7을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반핵운동의 완화를 위해서도 세제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원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원전주변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유치에 따른 행정·세제·금융지원 등 제도적 장치인 가치 원전주변지역개발에 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주민과 피해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제2의 탄광촌과 같은 현상을 예방하고 국내외적으로 불신과 핵공포에 시달리는 민의를 수렴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가 발사되면서 모든 나라가 경쟁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세계의 교육과정은 탐구위주 교육에서 암기위주 교육으로 전락하여 전인교육은 마비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정권이 교육을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해 왔고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 정권은 불법 찬탈한 정권유지와 학원담압을 목적으로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켰으며 따라서 작금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특수성과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접근해서 정치논리도 경제논리도 아닌 교육철학의 이념과 본질에 충실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실태를 보면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방적 관료행정과 권위주의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구적인 자율, 평가만능주의, 조급한 실적주의와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스승의 날 시위성 휴교, 대학교수들의 거리데모사태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보여 주듯이 본 의원은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룩하지 못했거나 정책적인 모순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들의 사기양양 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자는 명예와 자기철학과 양심과 긍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성직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교육개혁의 최우선과제를 교원들의 사기양양에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무직이나 기능공과 같이 취급했고 무리한 정년단축 등을 통해 교사들을 무능·부패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일부 비리를 전체로 매도하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획기적인 교원사기양양대책과 교원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대학교와 일반대학교의 차별화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교의 종류를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교육대학교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신군부의 정권찬탈로, 이 세상 모든 사회정의는 사라지고 암흑같은 철권통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유와 정의를 주장하는 양심세력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입학생 30%를 상대평가제에 의해서 탈락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자행함으로써 이 나라에 모든 교육의 기회균등을 박탈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을 호도하려는 차원에서 1982년에 지금의 산업대학교 체제를 도입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17년이 지난 지금 당초 산업대학교의 설립목적이 거의 달성되었고 그 고유특성을 일반 대학교들이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법적 차별이 있고 박사학위과정 설치문제 등 사회적 인식이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원천적이고 항구적인 재해방지대책, 재난관리제도의 개선, 피해보상의 확대문제와 수해의연금의 적정·신속 집행문제 등과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조조정을 구실로 재난관련 부서를 우선적으로 폐지, 축소하는가 하면 법적 의무사항인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을 외면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소홀한 실정인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정대책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관리센터 설치문제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국감에서도 보았듯이 매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주무부처의 예산 및 인력부족도 문제이지만 원천적으로 소관업무 및 관리체계의 혼선과 이로 인한 책임의식 부재에서 기인한 바가 큼니다.

우선 보건복지 분야를 예로 들면 수입식품 검사업무, 전염병·식중독 관리업무, 마약류 억제대책, 식품·의약품의 지도·단속업무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민보건사업들이 보건복지부·식약청·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부·교육부·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소관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시행 법률체계도 다원화되어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기대하기가 힘든 처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보건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통합하여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가칭 국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서 기동성 있고 체계적인 업무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해당 부처의 인력과 장비를 차출해서 활용한다면 예산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해현장의 긴급 의료봉사 및 진료활동이 정부당국이 아닌 의료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일회성 봉사활동에 그치고 있는바 향후 자연재해는 물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제약업체 등을 연계한 가칭 국가비상의료지원단을 설치해서 재난 시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사회보험의 두 기둥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자유민주사회의 필수요건으로서, 모든 국민이 병들 때나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안심하고 생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적 통합의 합리적인 수단이며, 평등사회를 창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미덕이며, 사회적 재분배의 원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이 늙고 병든 사람을, 잘살고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안쓰러운 사람들을 돕는 제도이며, 젊고 능력 있을 때 조금씩 모았다가 힘없고 어려울 때 생활의 안

정을 약속하는 지혜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제도를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500만 명의 반대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시켜서 2000년 7월 1일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한 연구부족, 철저한 준비 부족과 과거 성취의욕이 결여된, 모자란 장관들의 직장의보에의 설득 부족과 대국민 홍보 부족으로 국민 공감대를 이룩하지 못한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지난 88년 국회에서 결의된 법을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총선과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서류조작까지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본 중대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다시 지연되는 일이 없이 2000년 7월 1일부터 장관직을 걸고 시행할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 확답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언론말살공작이 김대중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었음이 이번에 정형근 의원에 의해 정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새 천년을 여는 15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러한 사실이 일찍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대중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중 밝혀진 한 부분으로 병산의 일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언론말살 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라도 오직 장기집권만 하면 된다는 무서운 음모의 실체가 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내년도 총선에서 온갖 수단

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승리를 탈취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만이 이 나라의 영원한 집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정권 언론말살 음모 공작사건의 본질은 문건을 누가 작성하여 누구를 통해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건이 실제의 진실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되고,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언론을 완전 장악하여 언론자유를 말살하려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박광태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 얘기 하지 말아요!)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2개의 문건을 보면 실로 무시무시한 전율을 느낍니다. 어쩌면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정국과 언론말살정책에 그렇게도 일치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언론말살 문건이나 내각제 문건, 8·15 광복절 경축사, 16대 총선거 대책 등이 문건대로 사실로 착각 진행되고 있음에 실로 으스스한 느낌마저 듭니다.

(○박광태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이 정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아침 모 일간지를 포함한 언론들조차도 언론말살 문건과 실제 언론탄압 사례가 여러 가지로 일치하고 있는 점을 적시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사실의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오직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의 성찬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첫째, 언론말살 공작문서가 공개되었을 때 국민회의 의원 모두는 정형근 의원의 자작극 내지 조작극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비난과 인신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는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똑같습니까?

또한 중앙일보 간부가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국민회의 주장도 거짓말임이 탄로 났습니다. 국민회의는 정형근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중앙일보 간부가 누구인지 지금이라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찬 씨도 아직도 여전히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종찬 씨가 언론말살문건을

받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먼저 북경으로 전화를 해서 국내 언론상황을 상의한 사람이 그 기자가 작성하여 전달한 문건을 받지도 보지도 않았고 이제는 그 문건작성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6월 24일 문건의 문건을 팩스로 전달받고 7월 초에는 식사까지 함께했다면서 그 문건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한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인격 치고는 너무나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뻔한 거짓말은 그만두고 이제라도 이종찬 씨는 진실을 사실대로 밝혀야 할 때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앞에 아직도 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국민회의를 보고 있으면 과연 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도덕성을 갖추었느냐 하는 의문마저 드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내각제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함께 공약했던 많은 일들이 파기되는 현 상황에서 아직도 그들과 같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말살 음모공작 사건의 진실에 의해 드러난 정권의 도덕적 파탄행위에 대해 온 국민 앞에 대통령이 사죄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언론말살공작에 관련된 이종찬 씨를 비롯한 모든 언론탄압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근안이 어제 자수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고문도 그 진상을 밝혀야 하겠습니까만 작년 9월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 억지로 이른바 충격요청사건을 조작하면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자행한 고문사건은 1년이 넘도록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만 하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저지른 고문은 은폐하면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 언론말살공작사건이나 도·감청 의혹으로부터 이근안의 자수를 이용하여 국민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지난 6월 옷로비 사건 때 신창원이 잡혔고 이번에는 이근안이 자수했습니다. 일부의 의심의 눈이 기우이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60여 일 후면 새 천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뉴밀레니엄시대에는 지식정보사회, 평생학습사회 등으로 특징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새 천년을 맞으면서 분주하게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일사불란하게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문턱에 서서 과연 이 나라에 희망과 미래가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거짓과 독선과 아집과 비방이 판치는 이 나라에서 어떠한 새 역사가 창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위 국민의 정부, 즉 DJP 공동정권은 지난 15대 대선 때 공약으로 17개 분야 170개 공약을 내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그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말까지 내각책임제로 바꾸겠다는 DJP의 철석공약조차도 헌신짝이 되어 버린 지금 나머지 공약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공약들을 믿고 따랐던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가슴이 저며 옵니다.

교육분야의 최대공약은 교육재정을 GNP의 6%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현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고 이제 두 번째의 예산이 결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GN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말기 97년에 GNP 대비 4.6%까지 교육재정을 확보해 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를 장담했던 현 정권은 98년 4.3%, 99년 4.2%, 그리고 2000년에는 4.1%로 급전직하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했는지, 또 교육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소홀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도 이 정권의 한 축으로서 97년 대선 때 공약사항을 충분히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쪽 총리로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재정의 GNP 대비 6% 확보는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6%를 확보할 것인지 연차별로 명확한 목표치와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사용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99년 현재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3000개 있습니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학교가 5000개 있습니다. 또 철거대상인 E급 판정을 받은 학교가 21개, 또 보수 및 개축이 필요하다고 D급 판정을 받고 있는 학교가 100개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교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교육환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불안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충분한 교육재정을 투자하기는커녕 대학의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하는 두뇌한국21사업이나 햇볕정책의 일환인 교원의 금강산관광 추진 등 다분히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2001년에 폐지되는 교육세의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68년에 정해진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법정교부율 11.8%를 적어도 15%까지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신설 수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붕괴된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육재정확보국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상당수 학생들이 수업을 외면한 채 장난을 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쓰러져 자는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에 자퇴하는 학생만 해도 몇백 명씩이라고 합니다. 지각·조퇴를 밥 먹듯 하는 것은 보통이고 어떤 수업은 끝날 때쯤 50명의 학생 중에서 20명 정도만 남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실붕괴의 실상입니다.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교사들의 78.6%가 교실붕괴에 공감한다고 반응

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99년도에만 교단을 떠난 교사가 2만 7000여 명이고 2000년에는 또 1만 1000여 명이 교직을 떠난다고 합니다. 실추된 교권을 비판하여 목숨까지 끊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교직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하는 교사들이 전체 교원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붕괴될 대로 붕괴된 교육현장, 실종위기에 있는 우리 교육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이 처참히 부서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학교현장에 교사와 학생은 있어도 진정한 교육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친 대통령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교육붕괴에 대해 어느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도 사범대학을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교원은 몇 세까지 교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몇 세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도 교원들은 65세 정년보장을 철칙같이 믿었기에 힘들고 박봉임에도 묵묵히 인내하고 교단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62세까지만 교단에 서고 그 후에는 떠나라는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팔순 가까운 노정치인들이 최고 지도자로 있는 현 정권하에서 말입니다.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대통령께서는 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묻습니다. 그 연세에 국무총리,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국정의 총책임을 맡으신 두 분 노원로들께서 연세로 인해 국정을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교사들이 연세 때문에 교단을 떠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교육부장관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교원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하십시오.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도 교원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무모한 교원 정년단축으로 이제는 초등학교 교원이 매우 부족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쫓아냈던 교사들을 다시 계약제로 해서 기간제 교사라고 하여 다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또 중등교원들을 3~4개월 연수로 초등교원 자격증으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초등교원은 올해만 해도 1만 6000명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체육전공 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현장을 두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또다시 1만 1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썰물처럼 교단을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교원공백으로 인한 교육부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교사들이 왜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지 보다 겸허한 자세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정권은 처음부터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우매함을 보였습니다. 참스승인증제, 담임선택제 그리고 촌지신고 교사 우대책 등 교사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웃지 못할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남발되었습니까? 학부형들은 교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나무랐다고 해서 경찰차가 와서 스승을 끌어가는 사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무슨 신바람이 나서 학생 지도에 열을 올리고 교육개혁을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실패한 교원정책과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교원들은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새 대입제도의 적용을 받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업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수업이 충실히 되지 않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공부는 주로 학원에 가서 합니다. 학교에서 담당하지 못할 특기·적성교육 때문에 새로운 학원이 생겨나고 이러한 학원에는 학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함

니다. 또 새 대학입시제도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행평가를 위해서 숙제를 대신 해 주는 학원도 생
겼다고 합니다. 또 이 수행평가가 이제는 학생들
에게 고행평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지도해야 될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사
들이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고 또 학교성적은
절대평가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 학생들의
성적 부풀리기를 위해서 시험문제를 쉽게 낸다거
나 가르쳐 준다거나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새
대입제도를 2005년부터 적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
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와 교육부장관은 아직도 2002년도 새 대입
제도 시행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새 대학입시제도는 대학의 자율에 맡
겨서 학생을 선발해서 졸업시키는 전 과정을 대
학에 완전히 맡겨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뇌한국21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교육부 지원사업이라고 자랑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20세기 마
지막 교육부의 실패하고 있는 대학행정정책이라
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기 학문
과 비인기 학문, 두뇌집단과 비두뇌집단, 대학을
서열화하고 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의
혹·부정, 또 정확한 심사결과가 믿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제 BK21이라는 사업은 온 대학교수
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농성을 하고 또 대학
들을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 넣고 있습니
다. 여기에 매년 2000억 원씩을 투자하는데 앞으
로 7년간 1조 400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

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두뇌한국21사업을 전면적으로 원천 중단할 것
을 건의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실패한 교육정책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
정책의 실명제를 주장합니다. 실패한 교육정책,
지금 붕괴된 교육의 책임자에게 낱낱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와 교육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대학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국의국어대 이사장과 덕성여대 이사장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키십시오. 외국어대 이사
장은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덕성여대 이
사장은 현 대통령의 모태인 아태재단 이사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상당한 고령으로
분류가 극심한 대학재단의 이사장으로는 책임이
아닙니다. 또 그중 한 분은 비상근 이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실정법까
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
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만 찍는 사람이라고 무
책임하게 또 부도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가서 분류를 수습하라고 내보냈는데 오히려 그
대학들은 분류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원래 제자리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
고요.

다음 여성관련 정책은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
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
다음 순서로 경북 구미의 박세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직 의원 자유민주연합의 박세직 의원입니
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제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착잡
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새 천
년을 여는 21세기만은 기필코 우리 국가가 환골
탈태 거듭 태어나서 참으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
은 국회,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시
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 천년의 희망찬 21세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7월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

사에 의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겨레가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88서울올림픽이 새마을운동 다음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북한의 김정일마저도 남쪽의 경제가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여서 더욱 발전한 것 같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날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합심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값진 성과와 결집된 국력을 국가 융성의 상승기류로 승화시켜서 국가도약의 기반으로 활용, 극대화하지 못한 채 쇠진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아쉬운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의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위원 여러분, IMF 구제금융하의 경제적 위기를 가까스로 수습해서 이제 화합과 전진, 번영과 통일의 길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21세기 벽두에 펼쳐지는 2000년의 ASEM회의, 2001년의 한국방문의 해, 2002년의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이 중 월드컵축구는 올림픽과는 달리 10개 도시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까닭에 사실상 국가 전체가 월드컵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나 정부여당 대표연설을 종합해 보면 2002년 월드컵축구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나라를 관광대국으로 부상시키고 나아가 21세기 1등 국가로 도약케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축구의 준비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시간관계상 주로 2002년 월드컵축구의 대비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성공시키는 주요변수는 무엇보다도 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국가 대표선수의 선전 그리고 국민의 손님맞이 자세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선진국 수준의 문화시민 정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부정적인 요인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는 현상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국민정신 선도운동의 견인차로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발주시켜 친절 청결 질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가 국민의식개혁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보다 큰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가운데 적성이 맞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파견시켜 줘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지원해서 지방조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는 우리의 훌륭한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월드컵,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월드컵,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친절과 예의를 다하는 관광월드컵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에 말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2002년 월드컵축구에 임하는 정부 차원의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과 청사진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이 요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대북 유화정책을 펴면서 나름대로 얻은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금강산관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한이 지원하는 외화수입으로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반면 오히려 우리 국민의 대북 경각심은 크게 해이해져 가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ASEM회의의 안전책임은 대통령경호실에, 2002년 월드컵축구의 안전책임은 국가정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와 안전은 일개 국가기관만이 전담할 성질이 아닙니다. 관련기관과 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시간을 두고 제반 위해요인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북한 공산주의자에 동조하는 세력 내지는 사회 불만층에 대한 테러나 사회 교란행위 등으로 국제행사를 전후해서 요인을 암살하거나 국가전략산업을 파괴·마비시킬 소지는 없는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날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교통사고 1등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이 땅에서 한강의 교량과 아파트, 학교 등 각종 구조물에는 대형 안전사고의

요인들이 도처에 잠재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안보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종합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퇴폐업소의 난립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흡연, 약물복용, 심야의 폭주족이나 가정과 괴범들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탈선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모 외국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은 술과 섹스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도덕과 윤리도덕, 예의범절과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국제대회를 치르거나 외국 관광객을 맞이함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 역할은 그 누구보다도 택시기사와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관계자 그리고 관광안내원들의 몫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난폭운전과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6년 아시아경기대회나 88서울올림픽 당시 유니폼을 입고 아침 일찍이 경기장을 향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요금마저 받지 않았던 그 아리따운 마음씀씀이와 또한 국민적인 일체감은 어디로 갔는지 한편으로 아쉽고 한편으로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택시기사,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안내원의 친절한 자세를 제고시키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 수가 태반을 이루고 있는데 아직도 도로표지판에는 제주 서귀포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한자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독립기념관, 박물관, 주요 문화유적지 등 외국인에게 문화적·역사적·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곳에는 일본어나 중국어에 대한 설명서나 표지판이 준비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로마자의 한글표기법에는 기호사용이

나 발음 등에 불편이 많습니다. 차제에 한국인에게 익숙한 영어 위주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 데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에는 무엇보다도 호텔 숙박업계의 건전한 직업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호텔과 숙박업소에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경영과 재정이 어려워져 시설개선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호텔업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건전한 직업윤리와 봉사정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 숙박업소들의 애로는 어떠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결같은 소감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출한 관광상품이 좀처럼 발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경기장에 대해서 그간 크고 작은 문제점이 없지 않았으나 대체로 수습되어서 전반적으로는 계획보다 앞당겨져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인재사고와 시공업체의 부도와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서 공기 내에 건설이 어려워지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의 예방책으로 정부가 특별평가반을 구성해서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면밀히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국의 대기,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문제는 비록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오염의 속도가 더 빠른 현실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 대도시의 대기오염도는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천연가스용 버스

시범은행 계획만으로도 여전히 미흡합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의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오존경보 등 오염기준 초과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쟁점의 대상이 되었던 낙동강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전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은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낙동강수질개선안을 발표한 이후에 처음 열린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저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낙동강 물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의 시행에 앞서서 지역갈등의 해소와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 내지 지역이 기주의의 극복이 가장 극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동포를 포함해서 세계 도처에서 식량부족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 가는 판국에 식량 자급자족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가 1년에 음식쓰레기로 처분되는 양이 무려 8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의 식탁문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개혁, 개혁 하면서 이처럼 손쉽고 기초적인 사항을 왜 소홀하게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매우 곤란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시도하다가 유아무야되었던 '식단체'와 가정과 식당에서 '덜어 먹는 식사법'을 반드시 정착시켜서 음식쓰레기를 과감하게 줄이고 국가의 자원과 재정을 아끼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계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노동부·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IMF사태 이후에 실직 노숙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자의 형태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ASEM 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계적인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동을 앞두고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큼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6·25 전쟁 당시 노근리를 비롯한 민간인 학살 의혹사건의 진상조사 문제를 전후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 온 소위 대미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월남전 파병 당시 미국정부와 맺었던 브라운각서에 의한 양국 간의 협약서에 의해서 현대 화학전의 피해자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의증 환자의 배상문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만약 주권 차원에서 미국 법정에 제소할 수 없다면 마땅히 미국정부를 설득해서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국은 중국대륙과 인접해 있는 데다가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산성비와 황사현상으로 말미암아 대기오염과 황해 등 바다의 오염 내지 토양오염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피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이며 다음은 일본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성은 매우 절실한 현안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리적으로 한·중·일 3개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황해 오염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놓여 있는 제주도를 동북아와 아시아 환경청정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환경라운드를 유치해서 제주환경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중·일 3개국의 환경장관회의와 서울평화상 각 분야 국제회의의 사무국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주도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환경메카로서 또는 국제관광 자유도시로서 동양의 스위스이자 매력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전교조가 실시한 교사·학생 설문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교사의 78.6%가 학교 교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만큼 교실붕괴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 교실에서는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 중 3분의 1은 줄

고 있고 3분의 1은 장난을 치거나 교실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동료학생을 불러내고 나오지 않으면 왕따를 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교사는 갈수록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회의심마저 생겨서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실종 현상, 교실 붕괴 현상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여론조사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패지수를 92개국 중에서 50위, 뇌물지수를 19개국 중에서 18위로 각각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패지수와 뇌물지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국가 불명예의 늪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왕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운동을 범국민적인 개혁운동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권도 물론 이 운동에 동참해서 과거 새마을운동을 이끌었던 정신으로 적극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전개한 새마을운동으로 조국근대화의 기반을 구축했고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한껏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패와 뇌물, 불법과 무질서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대명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할 시대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되돌아가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쾌적하며 가장 따뜻하면서도 정직하고 친절하게 2002년 월드컵대회와 각종 국제대회를 멋지게 치러 내어서 통일된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세계 속에 우뚝 솟는 밝고 희망찬 새 천년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석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홍 의원 한나라당 소속 전석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며칠 전 정형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힌 이종찬 씨 사무실에서 언론관련 문건과 함께 입수하였다는 두 번째 문건에 의하면 내각제 연기방안 등 현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정국현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역시 언론말살 문건과 똑같이 거의 실행에 옮겨진 사항들입니다. 결코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입니다.

내각제 연내개헌 문제는 공동정부의 대국민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개헌을 하자면 원내 3분의 2 이상 찬성 획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연내개헌을 하지 않고 유보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총리께서 먼저 내각제 개헌 연내불가를 제안하셨는지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문건에는 총리께서 스스로 다음 선거 때까지 내각제 개헌 연기를 제안하는 것을 유도하도록 대통령께 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건의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권유를 받고 내각제 개헌 연기를 제안하셨습니까? 8·15 경축사에는 역대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일 태세가 안 되어 있으므로 제안하지 않도록 이 문건이 또 권유를 해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16대 총선거는 운명을 건 한판 승부라고 보고 새 피 수혈방법, 영입위원회 조직, 선거요원의 연수원 훈련 등도 제의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정국현안 문건들을 생산한다는 여의도 사무실은 이 정권의 또 다른 비공식기관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어떻게 국가의 주요현안을 이러한 개인사무실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실이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현장일 수도 있는 만큼 당장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실체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참여자들에 대해서 즉각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이 성공을 하려면 정치적 순수성, 뚜렷한 실천목표,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됩니다. 출발시점부터 논란이 있어 온 제2건국운동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은 실질적으로 관 주도 운동입니

다. 중앙조직의 기획단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교체했지만 운영 면에서는 종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으로 인해서 총선용 전위 대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 핵심 기능을 하고 있는 기획운영실의 구성원을 보면 총 28명 중 20명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현직 공무원이고 계약직 8명 중 간부직에 모 정당 기획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연청중앙회 조직실장, 모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캠프의 기획실장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순수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특정 목적을 띤 운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9억 원의 예산을 제2건국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 지방예산과 99년까지의 중앙예산을 합하면 132억 원이나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1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성남시와 안산시에서는 1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해를 심하게 입은 파주시는 수해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46%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제2건국위 예산으로는 5400만 원을 계상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2건국운동은 의식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부채가 16조 8000억 원이고 지방세 세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 하는 자치단체가 58%인 144개임에도 불구하고 제2건국위원회의 회의비, 수당, 여비 등에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개혁하여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1개 자치단체가 제2건국위원회에 사무실을 특별히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57개 자치단체에서는 본청에 사무실을 배정하여 인력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2건국운동이 관 주도 운동이라는 징표가 아닙니까?

제2건국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 484명, 지방위원 9367명으로 총 9851명에 이릅니다. 중앙위원은 대통령, 지방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제2건국운동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주장하지만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실제는 중앙과 시·도, 시·군·구로 체계화된 제2건국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는 일체성을 지니

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기관, 단체, 민간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제2건국위원회가 모든 단체의 상위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구에서는 특정정당의 간부가 제2건국위원회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제2건국운동이 무엇을 하는 운동인지 알고 있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중점과제들은 모두가 기존 행정조직이나 민간조직의 실천으로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존조직을 통한 실천운동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국무총리께 물겠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예산만 소모하면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주는 제2건국위원회는 해체하고 실천과제들은 기존 정부조직이나 민간단체들의 실천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민간단체에 지원할 예산 150억 원을 확보하여 75억 원은 정부에서, 7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심의 때에도 집행방법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316개 단체로부터 433건의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123개 단체, 140건의 사업에 1000만 원에서부터 8억 원까지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제2건국운동 관련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을 보면 7명 가운데 2명은 공무원이고 민간인 심사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제2건국위원회 기획위원들입니다. 지원을 받은 일부 단체는 단체장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 선정과 예산배분에 있어 원칙보다는 선심성 배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계획서 가운데 정부의 구미에 맞는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정부의 의도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케 하여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을 하고 건전한 NGO로서의 역할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선정과 지원액 결정, 사업의 중간평가에 의한 보조금 교부 등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

로써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를 장악하고 폭넓은 관변단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래의 뜻과 상관없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 지원예산을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여 정부에서 임의로 나누어 주기식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죽이는 결과를 또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단체운영에도 역효과를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는 정부로부터 사업선정을 받아 8억 원의 지원액과 자체부담금 7억 원으로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대한 구호활동을 전개하는 이른바 인보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을 전국화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장, 행정관계자, 통반장, 이·미용업, 목욕탕, 부동산중개소, 약국, 병원, 심지어는 편의점 등 모든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35명부터 110명의 회원으로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네트워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제2건국운동을 시작하면서 각종 사회, 시민단체를 민간추진 주체로 전국 네트워크화하려던 당초의 구상이 읍·면·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취지문에도 민간사회안전망은 제2건국운동에 일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구호대상자에게는 희망카드를 발급하여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읍·면·동 단위의 이와 같은 그물조직과 희망카드로 관리되는 구호대상자 관리 조직이 우리나라 정치숙성상 선거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악용 소지가 없다고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인보운동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억지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회비 명목의 돈을 거두어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순수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미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국조직인 민간사회안전망 조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도 조직운영에 쓰여질 것이 아니라 새마을 중심의 인보운동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동팀은 직제상 경찰청 수사국 소속 조사과로 되어 있으므로 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실을 사직동에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 옷로비 사건 같은 주요사안의 조사에도 경찰청 위임 전결규칙에 의거해서 팀장인 조사과장이 전결 처리함으로써 본래의 지휘체계에는 공식적인 보고도 하지 않고 법무비서관에게만 보고, 처리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직동팀의 조직과 기능이 이러하므로 경찰청장이나 수사국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는 없고 명령계통이 따로 있어 주요현안 사건조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책임 있는 지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직동팀 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나 증언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전결권자인 사직동팀장인 조사과장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까? 국민의 정부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사직동팀을 이대로 존속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경찰은 현직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현직검사가 아닌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엄연히 위법입니다. 조직체계를 무너뜨린 사직동팀은 해체하거나 본래의 조직기능을 되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에 따르면 조사과는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자료, 첩보의 수집 및 내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에서 고위층 및 고위층 친·인척과 관련된 사안이나 고위공직자 관련 진정·투서 등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조사대상이 한계가 모호하고 관련자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내사하게 되므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의 후원금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직동태가 국민의 정부 출범 후인 98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처리한 사건은 모두 176건입니다. 이는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처리한 건수 37건에 비해서 5배에 이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조사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 중 고위공직자, 고위층 관련 사안, 정치인 관련 사안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할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수준과 지도력, 강한 책임감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경기도 임 지사는 이미 도지사로서 지녀야 할 높은 도덕성과 도정을 수행할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어떻게 800만 도민의 얼굴로서 개혁을 주도하며, 산하 공무원들에게 부정부패 추방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도의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경기도를 위하여, 전 공직사회를 위하여, 국민의 정부의 개혁을 위하여 자진해서 사퇴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속정당인 국민회의에서는 이미 출당시킨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경기도지사를 사퇴토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는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정부에서는 99년도 예산의 1%를 문화예산에 책정했다고 합니다. 늘어난 문화예산은 문화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나 관광산업으로 분류될 예산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순수 문화발전을 위한 투자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재는 우리의 값진 자산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소홀하여 일부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가 해충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의 보수, 정비와 관리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방의 전통문화와 문화재도 찾아서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긍지심을 심어 주고 그리고 또 자랑스러워 삼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지표조사와 발굴·보존조치를 위한 여러 가지 뒷받

침을 해 주고 지방의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며 지역 학교에서 지방문화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문화원이 지방문화의 센터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다음은 서울 광진을구 출신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의원 20세기를 넘기는 마지막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거짓으로 드러난 정형근 의원의 발언이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계속 제기된다는 것이 참으로 딱하기조차 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책임하고 양심을 잃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민생현안을 앞에 둔 국회를 파행으로 빠뜨렸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정형근 의원의 조작극임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장내 소란)

정형근 의원은 전 청와대정무수석 이강래 씨가 언론탄압을 해야 한다는 문건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억지주장을 하여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문건은 중앙일보 기자 문일현 씨가 만든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정 의원은 문 기자가 만든 문건을 이강래 전 정무수석이 침삭·가필하였다는 등 기자회견을 통하여 엉터리없는 거짓말을 계속 해 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문건을 만든 문 기자는 정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문건은 자기가 작성한 내용 그대로이고 침삭·가감된 것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씨 비서관의 서류철에서 이 문건을 훔쳐 낸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도 팩스번호만을 감춘 채 문건을 그대로 복사해서 정 의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정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조작을 일삼아 왔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정형근 의원은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 씨가 대주주로 있는 보광그룹의 탈세조사는 문건 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억지주장을 했습니다. 보광그룹에 대한 내사는 이미 금년 3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은 다른 언론보도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탈세사실은 잘 알다시피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통상 3~4개

월의 내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 의원 자신도 잘 아는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내민 6월 하순 팩스 날짜가 찍힌 문건을 보고 그 석 달 전에 이루어진 대기업 탈세조사가 어찌해서 그 괴문건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그런 논리 전도된 말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염치없으면 목이라도 움츠리는 것이 자라라고 할진대 그만도 못합니까, 그래! 궤변을 더 이상 늘어놓아서 흑세무민하지 말도록 저는 충고합니다.

그리고 국리민복을 우선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를 마치 미친 사람 널뛰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건전한 상식조차 통하지 않도록 만든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이 국회가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권유린의 20세기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을 통해서 6·25 당시 미군의 무차별 양민학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근리라는 낯선 마을이 우리에게 엄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노근리의 피해자들은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자신들의 사상을 의심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AP통신이 이 사건을 무차별 양민학살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금기된 영역에 말문을 터 주기까지 그동안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했던 것입니다.

노근리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를 저는 되새겨 보았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했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부끄러운 과거의 매듭을 풀고 정리하는 작업이야말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무차별 양민학살과 인권유린의 시각에서 이제는 더 이상 덮어 둘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제주 4·3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제2, 제3의 노근리 사건들이 제주도 곳곳에서 수년 동안 헤아릴 수도 없이 거듭 반복되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희생자가 우리 군과 경찰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인권유

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했던 해방정국 아래에서 빚어진 1947년 3·1절 기념행사의 양민에 대한 경찰 발포사건 이후 치안당국과 제주도민 사이의 반목과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1948년 4월 3일 무장유격대의 경찰지서 습격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 군과 경찰로 구성된 토벌대의 과잉진압이 장기간 거듭되면서 양민희생이 제주도 전체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이 발생하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했던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해서 크게 틀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주 4·3은 한라산에 대한 금족령이 해제되는 1954년 9월에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장 7년 동안 피흘림이 계속되었던 제주 4·3 사건은 과연 그 희생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당시의 제주 인구 약 27만 명 중 적게는 3만 명 이상, 많게는 7~8만 명 수준에 이르렀으리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건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제주 4·3을 이렇게 어렵짐작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살아남은 우리들의 나태와 비굴함을 반증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양민희생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었던지, 양민들의 사상을 의심했던 당국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양민을 선무(宣撫)해서 피해를 줄이지 못한 초토화작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짚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피해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벌 군인들의 분풀이에 의해서 400여 명이 몰살한 이른바 세칭 북촌리 사건입니다. 1949년 1월 17일 아침 일부 군 병력이 이동하던 중 북촌마을의 어귀에서 게릴라의 기습을 받아 군인 2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인근부대의 2개 소대 병력이 북촌마을에 들이닥쳐서 남녀노소를 구분치 않고 주민들을 모두 북촌초등학교에 집결시켰습니다. 온 마을을 불태워 400여 채의 가옥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내몰린 주민 1000여 명가량이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자 우선 ‘마을 보초를 잘못 섰다’는 이유로 민보단 책임자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즉결 처형을 하고, 무장대와 내통한 빨갱이가족을 찾아낸다면서 주민 수십 명씩을 무작위로 끌고 나가서 차례차례로 처형했습니다. 이 학살극은 오후 5시 무렵 현장에 달려온 상급지휘관의 중지명령으로 끝났지만 그날 하루 동안 대략 300

여 명이 빨갱이 색출이라는 명목 아래 희생당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머지 주민들을 다음 날 함덕으로 다시 불러내서 100여 명이 더 희생당했습니다.

토벌대의 분노와 이들에 걸친 이 학살극으로 인하여 북촌마을에서는 매년 선달 열여드렛 날 400여 명의 원혼을 달래는 집단 제사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4·3 사건을 겪은 70대 이상의 노인이 단 1명 뿐이라는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1948년 12월 14일 토벌대가 토산리 주민들을 향사에 집결시킨 후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들과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분리시켜서 표선초등학교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이들은 며칠 후 표선백사장에서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총살당했으며, 그 희생자 수는 대략 15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겪은 이 마을 주민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폐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아직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의심스러워서였다면 왜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과 젊고 예쁜 여성들만 문제가 되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던 그들,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의 원통함을 알 길 없는 표선백사장에는 오늘도 무심한 갈매기만 날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이 비극, 바로 안장할 유골을 수습할 수도 없어서 헛묘를 세운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의 사건을 보면 너무나 처절합니다. 49년 1월 22일 동광리 주민 수십 명이 정방폭포 위에서 집단 총살을 당하고 그 시신은 폭포 아래로 내던져져 바다로 떠내려가거나 폭포의 소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총살현장에서 토벌대들은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총살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정방폭포 부근에는 동광리 주민 이외에도 여러 차례 집단희생이 더 있었고 1년 동안 현장 접근을 금지하는 바람에 이미 시신은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버려 마을 주민들은 무속인으로 하여금 희생자들의 혼을 불러들이게 하여 유골이 없는 헛묘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시원스레 떨어지는 정방폭포의 물살 아래에는 아직도 저세상으로 가지 못한 원혼들이 폭포 살을 맞으며 시신을 부대끼고 있지만 우리는 무심하게도 그 원혼들 앞에서 여행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최소한 3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희생자의 80%가량이 48년 11월 중순경부터 49년 2월경까지 계속된 이른바 초토화작전 시기에 희생당했습니다. 산속에 숨은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앤다면서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해안 쪽으로 대피하라는 소개령이 1948년 11월경부터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소개령을 전달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희생당했으며 부녀자, 어린이, 노인들은 신속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의 모든 마을들이 불살라지고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사살되었던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처참한 폐죽음은 바로 이 초토화작전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군 작전상 소개란 취약지구의 인원과 물자를 후방 안전지대로 후송시킴을 뜻하는 것인데 당시 감행된 초토화작전은 아예 마을에 불을 놓아서 옷, 식량 등 물자는 물론 집까지 모조리 태워 생활근거지를 빼앗고 거기다 주민들 사이에 폭도들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주민들의 생명마저 파괴대상으로 삼은 결과 무자비한 양민 살상행위기도처에서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무차별 학살이 자행된 이 같은 초토화작전의 근거로 계엄령을 말합니다. 증언자들은 ‘그때는 계엄령 시절이라……’, ‘계엄령 때문에……’라며 처절하기까지 한 양민학살극들을 체념하듯이 말합니다. 노인들은 그저 계엄령이란 것을 재판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양민을 즉결 처형할 수 있도록 하는 초법적 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31호로 발표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은 계엄령의 근거가 되는 계엄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계엄법이 계엄령 선포 이후 무려 1년 뒤인 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합법적 근거도 없이 선포된 바로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저항능력도 없는 어린이, 노인, 부녀자까지 무차별 학살되었던 것입니다. 설령 합법적 계엄령이라 하더라도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이, 노인, 부녀자까지 무차별 학살되고 재산을 소훼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처참하기 그지없는 제주의 4·3은 육지의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잊혀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6·25 사변 다음으로 비참한 사건인 제주 4·3을 우리는 적어도 저절

로 잊혀지도록 의도하고 있거나 전설이 되어 가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정권 이후 짧은 기간의 민주화 열기를 제외하고는 압제적 군사정권이 계속되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단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한반도의 냉전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반공이 우리 국민의 의식 속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사고가 됨으로써 당국의 그러한 금기조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주 4·3의 공개적 논의는 물론이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에 소재로 삼는 것조차 단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78년, 작가 현기영 씨는 제주 4·3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단편집 '순이 삼촌'을 발표했지만 곧 판금조치를 당하고 현 씨는 그 소설로 인해서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순이 삼촌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위령제를 한 번 떳떳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하자는 것이다.’

같은 작품집의 '해룡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떳떳히 분노를 터트려야 하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빨갱이로 몰릴까 봐 두려운 것이다. 피해자인 섬사람들은 5만이 넘는 엄청난 죽음들을 천재지변으로 치부해 버린다.’

압제적 정권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4·3을 소설의 소재로 삼는 것마저 금지했던 것입니다. 제주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단지 억울함을 달래고픈 간절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과거정권은 철저히 봉쇄했던 것입니다. 다시 20년이 더 흘러서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는 97년 11월경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터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박준규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도 듣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국회 아닙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추미애 의원 올해 9월 국민의 정부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지난 문민정부까지만 해도 예술가들이 제주 4·3을 예술작품의 소재로 삼는 것마저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학술논문과 연구 성과물들은 제주 4·3과 공산당, 당시 남로당, 중앙당과의 연계는 희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해서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며 제주 4·3 발발원인을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마치 공산주의와 연계가 깊은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현대사를 가르쳐 이 땅에 다시는 그 같은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근거를 수집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대사를 다시 기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교육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민의 가슴앓이 그것은 바로 레드 콤플렉스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 1949년 4월 1일자 보고서는 48년의 제주도 사태에 대해서 '지난해 동안 1만 4000명 내지 1만 5000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최소한 80%가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공비가 아니라 대부분 주민이었고 군과 경찰에 의해서 희생되었음을 당시 미군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희생자들은 군경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자였으리라 사상적 의심을 받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연좌제라는 족쇄에 오랫동안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총리! 이제 제주도민들이 겪은 후유증과 정신적 피해를 이해하고 감싸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룡 이야기의 주인공이 빨갱이로 몰릴까 봐 분노를 표현할 수도 없었다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닌 절규라는 것을 며칠 전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로부터도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리! 제주 4·3을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로 취급해 버리는 동안 우리는 그 희생자와 유족들, 아니 전 제주도민에게 정신적 학대를

해 왔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전시도 아닌 때에 전쟁지역도 아닌 섬에서 왜 그런 초토화작전이 감행되었으며 집단학살이 자행되었을까요? 누가 지시한 작전이었을까요? 미국은 4·3 당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주 4·3 사건 당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생과 전개가 미군정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 이상 사건 초기 군정당국에게 책임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48년 8월 24일 체결된 한미 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작전지휘에 따른 책임이 미국 측에 있었습니다.

총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공조해서 미국 내 각처에 보관되어 있는 미국 측의 제주 4·3 관련 자료를 확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거정권이 음지에 가두어 두었던 역사를 이제 양지로 꺼내어 제대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판도라의 상자로 취급하여 열어 보기를 주저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웃 나라 대만의 2·28사건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7일 이등휘 대만총통은 2·28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였든 간에 현재의 정부는 당시 정부의 연장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그 사건에 관해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이후 대만정부는 사건 50주년인 97년, 과거정권의 잘못에 대해 정부의 공식사과를 발표했고 2·28기념탑과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사철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장내 소란)

○의장 박준규 추 의원, 추 의원……

○추미애 의원 우리에게도 제주 4·3의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내 소란)

○의장 박준규 조용히 하세요.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추미애 의원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고 중단되기는 했지만 60년 4·19 혁명 직후 국회가 제주 4·3을 포함한 거창·함양 등지의 양민학살사건

을 조사하고 ‘국회 4·3 조사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당국의 금기조치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제주지역 언론사가 큰 연구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제주 4·3의 진상규명 노력의 성과는 그 시대의 민주화 정도와 절대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야말로 인권존중을 중심가치로 삼고 있는 바로 이 국민의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대만처럼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 현재의 정부가 과거정부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총리께서 대통령께 공개사과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주 4·3이 대규모 인권유린의 가슴 아픈 역사였음을 인정하는 대통령의 선언적 사과가 선행되어야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실마리가 제공되고 정부의 의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양민희생자에 대한 금단의 영역에 접근하는 물꼬가 트이면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제주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사건의 원인, 성격, 피해규모 등 윤곽이 드러나면 개별적 피해실태 조사를 위한 실무위원단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실무위원단을 두고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제주 4·3이 시대의 비극이요 아픔인 이상 그때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그만해, 다 끝났어!」 하는 의원 있음)

새삼 구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상을 알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 없이 이들을 모두 아우르며 제주 4·3 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올바른 복원은 제주4·3 문제의 해결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지금껏 제주 4·3이 역사의 뒤편길에 왜곡된 채로 남아 있

었던 것은 비록 당국이 외면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철저한 무관심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국민의 정 부야!)

국회의원인 여러분들의 적지 않은 무관심한 자세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신보도로 인하여 세상에 진상이 알려지고 대책단이 구성된 노근리 사건처럼 제주 4·3의 진 상규명을 위해서 새삼 세계적 권위의 무엇이 필 요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충고 없 이는 자기 나라 역사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국 가와 민족의 자존심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겠습 니까?

그래서 총리, 바로 20세기의 마지막 장을 넘기 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솔직하게 풀려는 주체 적인 자세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총 리의 의지를 묻습니다.

20세기가 저물어 갑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 의 가치가 무시되었던 인권유린의 지난 역사를 바로잡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축복과 희망으 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준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정부질문시간입니다. 혹시 정치적인 발 언을 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하세요. 이것 끝나 고, 지금 여덟 분아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장내 소란)

가만있어, 내 얘기 좀 듣고..... 나는 얘기할 기회도 없어요. 자꾸 와서.....

지금 방청석에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우리 사 람이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김정숙 의원 이 말씀하실 때 8분 동안 이 문제만 이야기했어 요. 그래서.....

(○이사철 의원 의석에서 — 왜 욕을 해요! 미친년 널뛰다니.....)

글쎄, 그것은 나오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야 기를 하세요.

(○이사철 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할 기회 를 달란 말이에요!)

하시는데, 내가 그때부터 이것이 대정부질문시 간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주의를 주었는데 대정 부질문은 안 하고 이 이야기를 자꾸 하니 이 얘 기를 좀 동결을 시킵시다. 시키고.....

(장내 소란)

가만히 계세요. 속기록 보고 의회용어로서 안 맞는 것은 내가 고치겠습니다. 나한테 맡기시 고.....

(「본인이 사과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하 시면 다른 것도 안 되니까 다른.....

(○이사철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사과해 야지!)

오늘 발언 예정시간에 의원들 이야기 다 들으 시고 그다음에 또 하시려면 하십시오. 저한테 맡 기시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다 정치적인 것 아닙 니까? 그렇게 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총무들, 조금 후에 끝나고 하든지 조금.....

(「지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백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나?

(○백승홍 의원 단하에서 — 신청했으니 먼 저 해 주셔야 정상적 국회운영이 될 것 아 닙니까?)

(○권기술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사진 행발언 좀 주십시오.)

(○백승홍 의원 단하에서 — 양쪽 다 주시고 지금 다 주세요.)

다음 질문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양쪽에 다 준다고, 양쪽에..... 앉으세요.

(○이공규 의원 단하에서 — 대정부질문만 해 주세요.)

글쎄, 원칙은 대정부질문 시간은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을 하는데 이래 가 지고 되겠어요?

(○이공규 의원 단하에서 — 대정부질문만 해 주세요. 원칙대로만 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대정부질문하고 그다음에 주자 이 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잘못된 것을 내 가 손질을 할게요. 나를 믿으세요.

(장내 소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인데요. 사흘째 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또 할 것 이 있습니까?

○ 의사진행의 건

(15시53분)

○의장 박준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의사진 행에 관한 것이지 남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공부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취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외에 발언 꼭 하자 하면 저는 산회 선포하렵니다. 이것 발언 드리겠어요.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 나오셔서…… 좌석에서 연설 그만하시지요.

○오양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자리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의원님께서 차마 의원으로서 는 입에 담지 못할, 물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그렇게 저속한 표현을 쓰실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에서 더군다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형근 의원이 한 발언이 지금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한다고 총무 간에, 양당 총무 간에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호도를 하면서 ‘미친 사람 널뛰듯이’라는 말을 하는 가 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등 막말을 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한영애 의원님은 이 본회의장에서 ‘정형근 의원 죽여 버리겠다. 이회창 망할 것이다. 한나라당 망할 것이다’ 하는 또 막말을 하셨습니다.

두 여성의원님이 하는 발언을 듣고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었습니다마는 그 도가 너무나 지나칩니다.

정형근 의원이 하신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면 될 일을 가지고 우리 당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속한 말을 하면서 동료 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고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권고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가서 물컵을 던지면서 행패를 부린 장관을 사퇴시켜야

하는데 그럴 때는 해임건의안에다 부표를 던지면서 같은 동료 의원에게 사퇴하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은 의장님께서 속기록에서 당장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추미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정형근 의원님에게 그리고 여기 많은 동료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하실 것을 정중히 건의를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규 다음은 경기 안산갑구 출신 김영환 의원……

(장내 소란)

우리 꼴이 이게 뭐요! 같은 얘기라도 점잖게 하세요. 모두 조금 뭐가 잘못됐어.

○김영환 의원 수요일, 저는 경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화요일 저녁 밤을 꼬박 새면서 국회의사당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형근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대정부질문을 이틀 동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또한 대정부질문을 하는 과정에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의총을 하기 위해서 퇴장하는 그동안, 4년 동안 별로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양순 의원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제가 약간 오해가 있는 듯해서 추미애 의원의 원고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형근 의원께서 미친년 널뛰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마치 미친 사람 널뛰는 듯한 모양으로 건전한 상식조차 통하지 않도록 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속담에 있는 말로서 우리가 이 국회를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국회로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에 평화방송의 이도준 기자가 이회창 총재를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마는 이회창 총재님과 이도준 기자는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

렇게 2시에 찾아가서 이회창 총재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정형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강래 수석과 그리고 이종찬 부총재가 그 문건을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초지종은 그렇게 알고 폭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 또 이종찬 부총재가 그것을 가필했거나 그런 적이 없다, 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자기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이사철 의원 의석에서 — 이도준 기자 대변인이야?)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회창 총재께 더 이상…… 정국을 풀다운해 달라, 그리고 사태를 확산시키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해서 사태를 수습했으면 좋겠다고 이도준 평화방송 차장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에 한나라당 의총을 통해서 이것이 수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도준이 이 사태의 본말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형근 의원께서 물론 우리 당 부총재의 문건을, 훔쳐 온 문건을 가지고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중앙일보 기자인 문일현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문서이고 따라서 이강래 전 수석이 언론탄압을 위해서 이 문건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바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날조한, 바로 사건이 확대·과장·왜곡·조작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형근 의원은 누구라면 알 만한 언론계 중진 하나가 이 문제를……

(○이원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을 알려 주었다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이종찬 부총재의 측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는 이종찬 부총재의 친·인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방송의 한나라당 출입기자가 이것을 훔쳐서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 의원은 이종찬 씨가 문일현이 언론문건의 문장을 다듬고 정리해 달라고 이도준 기자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도준 기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근 의원이 이 문제가 발생하자 이도준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도준과 정형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마는 이도준 씨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것은 팩트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형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각제 등 관련한 청와대 문건이 이도준 씨가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일일이 열거하는 이유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정형근 의원이 제기한 문건은 사실을 왜곡·확대 그리고 날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16시02분)

○의장 박준규 국정조사하면 다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까지 각자 생각하신 것을 좀 참으시고 우선 이 문제는 냉동을 시킵시다. 조금 참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가기강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국정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무능인지, 직무유기인지, 그도 아니면 오직 총선전략과 공동정권의 생존전략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정권은 자꾸 뭔가를 집어넣는 정권입니다. 전투기에 물 넣고, 사람 몸에 양젓물 넣고, 전화에 도청기 넣고, 언론에 압력 넣고, 이제 빼십시오. 백성은 불안 빼고, 언론에 압력 빼고, 정권 고집 빼고, 정치의 불신 빼십시오.

진실을 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 그리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변명이 많다는 것은 죄를 감추려는 당황스러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언론말살공작은 민생과탄보다 백배나 민주주의의 파탄사건입니다. 여당은 왜 덮어씌우는 데 그렇게 능수능란합니까?

이런 언론공작 사건의 본질은 문건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임과 여권 실세가 개입되면서 문건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처음 이 도준 기자가 정형근 의원에게 말한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 이종찬 씨를 특별히 불러 여러 가지 임무를 주면서 이강래 씨와 한 팀이 되어 일하라고 했고, 국정원과 정무수석실의 지원을 받아 각종 보고서를 생산·보고해 왔으며 매주 한 번씩 대통령과 독대한다’ 했습니다.

문제는 언론공작 문건대로 언론사 사주 구속, 세무조사, 8·15 경축사에서 대북문제 안 다루기, 내각제 연기 수순 등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국회발언은 보좌관이 필기하고 의원이 발표하면 작성 책임자는 국회의원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입니다. 문 기자가 작성하고 이종찬 씨가 소유했고 언론말살이 계획대로 진행된 현실에서 누구라도 중대한 과정을 청와대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총리와 법무부장관께 함께 묻겠습니다.

언론공작의 진원지인 이종찬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서 팩스 전송 사실 확인, 문건보고 채널, 아귀 딱 맞는 언론공작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소신 있게 답변 바랍니다.

또 총리께 묻습니다.

국정조사를 해도 지난 옷 로비와 조폐공사 청문회와 같이 거짓말 대화장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특검제 실시해서 국민여론에 부응하고, 역사의식을 바꾸어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 결심 없이 어찌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국가 권력기관이 동원되어서 언론공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헌법파괴와 국가기강을 흔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대통령께서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대국민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진언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벨기에에서는 다이옥신 파동 하나 가지고 정권 바뀌었습니다. 국정은 간데없고 총선만 의식하는 도덕적 불감증에서 얼른 발을 빼십시오. 또한 이근안 씨를 잡았는지, 왜 안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총리께서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난 2년간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보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의료보험 그렇습니다. 10여년간 소중히 가꾼 사회보험의 체계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민원대란을 겪은 국민연금은 이제 사실상 그 대안을 찾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의료보험이 또 이어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가지는 최대의 문제는 국민불신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 동안 진행된 혼란의 시기는 우리 국민에게 제도에 대한 거부감, 불신을 주었습니다.

올해 4월 실시된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는 국민연금을 10년 퇴보시켰습니다. 88년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한 이후 10년 지나면서 국민연금은 국민들 가슴속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제도적 안착을 할 뻔했는데, 올 4월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정부여당의 무리한 확대 실시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와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국민이 맨땅 위에 선 꼴입니다. 거부와 불신을 없애는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실질적 대안을 정부가 갖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행정 실패를 고스란히 내년 수급권자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한 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 심각성입니다.

결국 무리한 국민연금 확대실시로 국민에게 손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차액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정고갈이 예정된 연금재정에서 보전금액을 충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008년 완전수급 개시 이후 기금고갈이 될 것이라는 이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국민연금 수급액 보전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올 자영자소득과약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서 했고 위원 전원 찬성으로 설정된 정책과제였던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가 8·15 대통령 축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표에서 누락시켰습니다. 바로 총리께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대통령의 경축사가 중요합니까, 국민의 소득과 약이 중요합니까? 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국민 연금 공약 내걸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99년 8월 말 놓여민 납부예외자가 가입대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가입대상자 중 납부예외자는 절반 이상인 50.9%입니다. 아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643만 명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놓여민 지역에 지난 9월 보험료 징수율은 60% 정도, 도시지역 징수율은 65%를 밑돌고 있습니다. 상황은 악화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공약한 전 국민 연금의 모습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쪽짜리 연금도 안 됩니다.

총리께서는 반쪽 연금 어떻게 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의료보험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3개월간 정부여당이 제출한 의료보험법안도 3개입니다. 불과 3개월 동안 같은 법안을 두고 이렇게 조석변개한 예는 대한민국 입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작년 12월 말 정부여당은 날치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신들이 날치기한 법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행하기도 전에 여당의원 시켜 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사과 한마디 없었음은 물론 제출형식에 문제가 있자 정부 입법으로 다시 제출했고 문제가 또 되자 여당의원 입법으로 재개정 제출했습니다. 시행도 안 된 법안을 두고 그것도 정부여당이 날치기한 법안을 의원입법, 정부입법 마치 핑퐁하듯 3개나 제출했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꼴을 무엇으로 만들 것입니까?

날치기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총리께 사과를 요구하고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정부여당이 일관되게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정부여당의 핵심 유력자 이모 씨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에서 밝힌 것처럼 선거에 득이 되면

선이고 해가 되면 악이다 이런 일관된 원칙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복지부 내부 문건 99년 8월 18일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3쪽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년 초 통합공단의 업무혼란은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총선만 의식한 것입니다.

이것이 청와대와 여당, 현 정부의 복지정책관이라니 한심합니다. 행정부가 정치에 개입한 증거입니다. 선거에 개입한 증거입니다.

복지부장관 사퇴시키십시오. 이런 장관 데리고 어떻게 총리 노릇 합니까?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장관 사퇴를 건의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료보험은 이제 집 팔아서 보험료 내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실질적으로 의료보험료는 100% 이상 올랐습니다.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병든 남편 수발하며 밤늦게까지 식당일 하는 아주머니는 이제 집 팔아서 보험료 낼 팔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험입니까? 사회안전망입니까?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작 보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로부터는 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총수의 보험료가 7만 5000원에 불과한데 총수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22만 명이나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100%씩 올리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의료보험제도입니다.

부과체계에 대한 총리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정부는 의료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재정위기를 축소·은폐했습니다.

대책에서는 적자를 8600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잘못된 자료입니다. 의료보험의 정확한 재정적자는 1조 9000억 원입니다. 의료보험으로부터 광범위한 민심이반을 어떻게든지 잡아 보려고 축소한 술책입니다.

1조 9000억 원의 재정적자 인식으로부터 대책

은 다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데도 의료보험재정의 절감노력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약가 인하를 1년간 미루었습니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약가 인하와 수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약가 인하를 1년간 연기하면서 손해 본 금액만도 1조 원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약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료보험 안정화대책은 또 하나의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1만 2000원 정도의 소액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1만 2000원이 소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가벼운 감기라도 병원에 두세 번 가야 합니다. 그러면 금세 3~4만 원으로 붙어납니다.

3~4만 원이 우리 서민들에게 큰돈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 대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작은 병에 걸려도 돈이 무서워 차일피일 병원 가는 것을 미루다가 큰 병을 만들면 대책비는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돈 들게 하는 대책입니다. 지금 당장 폐지해야 마땅한데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더 이상 국민들의 바람막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정책의 보호막도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IMF 이후 대거 발생하는 실업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전락한 극빈자층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8월에 만든 법이 바로 이 법인데 정부는 법만 만들어 생색만 내고 시행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그물이 구멍 난 것입니다.

9월 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기만적인 예산편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기획예산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 절반인 38만 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조차도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한마디로 보호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가난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총리께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대로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고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그물망이 너무 크게 짜여져 있어 국민들이 그 그물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다. 그물 아래로 떨어지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정부는 다할 궁 자, 궁민의 정부로 전락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민들은 21세기를 발가벗은 상태에서 맞게 될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 하는 의원 있음)

여당의원님들, 옳은 소리 할 때 꼭 소리가 나는데요. 예, 하세요.

제외동포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날 태평양 건너 미주지역에서는 축하파티가 벌어진 반면 조선족과 고려인들은 반대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선족과 고려인들은 한 핏줄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배신감, 설움에 울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재미교포특별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밝혀 주십시오.

북한 배급체계의 붕괴에 따라 탈북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정부는 등록된 탈북자 수를 4000에서 8000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고 그러나 실제로는 30만에 이른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야 됩니다. 총리께서 대책 밝혀 주십시오.

최근 소련이 붕괴된 이후 소수독립국이 형성되면서 또다시 우리 고려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또다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적 책무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동포로서 도덕적 의무도 저버리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고려인 난민의 수가 얼마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현 대통령께서는 인권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국내 인권상황조차 개선하지 못하고 어찌 인권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국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 15년에 걸쳐 75명의 정신지체장애인 강제불임수술을 당했습니다.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중에는 수술 당시 17살짜리도 있습니다. 이 강제수술에는 국가 행정기구가 개

입했습니다. 강제불임수술은 대부분 보건소의 지원하에 시술하거나 가족계획협회 부속병원에서 직접 시술했습니다.

강제수술은 명확하게 불법입니다. 인권의 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하에서도 작년에 강제불임수술을 자행한 것을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총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를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국가배상 문제에 대해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내 인권문제도 매듭짓지 못하면서 동티모르의 인권을 걱정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끝으로, 새 천년을 맞습니다. 묵은 때와 지난 것들은 모두 역사 속에 묻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리께서는 전면적인 일반사면을 통해 새로운 세상 맞이를 할 대화를 할 각오와 대통령께 이런 사실을 진중하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행자부장관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컷 지금 선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을, 중간에 출마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조사를 왜 안 했으며,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직능단체들 일부가 총선 조직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탄압과 실업대책 등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이 국민의 정부가 국민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국민들의 아픔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진정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온당한 세상을 우리는 원합니다.

(○한영애 의원 의석에서 — 국민 팔지 말고 내려와요.)

옳은 소리 할 때 꼭 소리가 나오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규 수고하셨습니다.

각 당 대표의원께서는 2~30분 내로 앞으로 의제 협력 안 하면 이제 국회도 내일부터 개점휴업입니다. 정원 111명뿐입니다. 150명의 의결정족수를 모을 수 있을 때 하셔야지 안 그러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대구 서구 을 출신 이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대구 서구 을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중앙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한 폐단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서울의 이러한 역기능은 수도권 전체에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지역보다는 다소 싸다는 이유로 경기도 일원의 준농림지가 무분별하게 난개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교통난 가중은 실로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의 행정·산업·교육 등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교통난으로 인한 물류비용만 해도 97년도 기준 70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류비의 국내 총생산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21세기 국가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 및 전략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서울이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울에서 행정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겪었던 나라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 사례가 몇몇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경제중심지와 행정수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과밀에서 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서울을 안전하고 능률적이며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의 기능 중 행정기능을 분리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대전청사는 일부 외청들만 입

주하고 있어 외청 근무자들이 업무상 서울 출장이 빈번하고 대전청사에 입주한 9개의 외청들도 업무상 연관성이 거의 없어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조성된 정부 대전청사를 활성화하여 행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행정수도의 건설과 함께 기존 인프라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서울에서 행정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행정수도를 건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문제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 억제 위해 1960년부터 파리에 있는 대학의 일부를 리옹으로 이전하였고 91년에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인 국립행정학교를 파리에서 48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1959년 법률로 제정하여 공장과 대학의 증설을 억제하고 기존 대학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서울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대학교 전체를 한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단과대학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나누어서 이전하면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지방분산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권력의 분산을 통한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정치권력의 집중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권력의 집중은 이 나라 교육을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근본원인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사립대학교는 각자 분교가 있는 곳으로 이전하면 될 것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립대학교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기부금입학제를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그 재원으로 장학제도와 기숙사를 완비한다면 서민들의 교육비부담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

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바는 기술혁명을 이루기 위한 교육개혁은 아닙니다. 교육개혁은 오히려 인문교육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기능적 인간, 과학적 인간의 양성만이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인식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교육은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버린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야만의 정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본 의원은 경악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동료조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다음에 내장을 꺼내 나누어 먹은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따는 기계를 만들어 온 잘못된 교육 탓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까? 우리 모두의 처절한 반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이성적인 광란의 교육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절교육부터 시작해서 인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입시켜서 학교가 사람을 만드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설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인문과학의 르네상스를 우리 민족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선 그 첫 단계로 인성교육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을 GNP의 6%로 높이겠다던 정부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올해의 4.3%보다 낮은 4.1%의 예산이 책정되어 우리의 교육재정과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도 중·고교 수업료가 전국적으로 올해보다는 8% 내지 10%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사들의 인건비, 학교운영비 증

가에 따라 수업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부족한 재정을 수업료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수업료의 인상기준이 되는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3%대에 조성될 것이라는데 수업료의 9%대 인상은 형평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업료 인상보다는 조세체계 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전문가들의 견해로는 '68년도에 정해진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 법정교부율을 현행 11.8%에서 15%대로 상향조정해야 교육재정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업료 인상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세체계 개편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에만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 교사부족현상이 심각하고 교사들의 근무여건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교육재정 확보 방안과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수업료 인상계획을 취소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서 학교의 과중한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학교운영비 중 공공요금 점유율은 연간 25%이고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고 난방 및 조도개선사업이 추진되는 등 공공요금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애써 마련한 교육기자재를 아예 사용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공요금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산업용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도시지역에서는 인구증가, 주택의 재건축 등으로 기존학교가 60학급 이상 3000명 이상

의 거대학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운동장, 과밀학급, 각종 지원시설 미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구조가 완성된 지역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용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재원의 확보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동법 제4조3항에 의하면 초등학교용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의 경우도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초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중학교의 용지 확보 시에도 초등학교와 같이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거대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장관께서는 거대학교문제를 해소하고 중학교 용지를 원만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수치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기업의 87.2% 수준이고 대기업체와 비교할 때 70.4% 수준에 불과합니다. 철도청에 근무하는 L모 씨는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무려 8년이나 걸렸는데 8급 6호봉의 기본급이 54만 3700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소비실태 조사대상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 76만 3000원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공직생활을 8년 이상 한 공무원의 기본급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도 한 사람의 생활인입니다. 그들의 급여가 생계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뇌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최저생계수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면서 맹목적인 봉사만을 강요한다면 생계형 뇌물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처벌하기 이전에 이 정부를 뇌물죄의 교사

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공무원의 급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의 집행내역을 밝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행정자치부 장관의 답변은 90%까지는 밝힐 수 있지만 10%만큼은 밝히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10%에 해당하는 600억 원이 도대체 무슨 돈인지 특별교부금의 집행내역을 즉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안 비호세력을 철저히 색출하고, 행자부장관한테 색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어제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12년째 검찰과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피생활을 해 온 그가 무슨 이유로 자수를 했는지, 12년간 특별한 생계수단 없이 도피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비호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근안은 자기 집과 친척 집에서 숨어 지냈다고 하는데 지난 10여 년간 연인원 389만 명을 동원하고 검문검색을 358회 실시하고도 이근안을 잡지 못한 것은 신창원사건 이상으로 경찰의 수사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치안체계를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버젓이 자기 집에서 살면서 백주에 대로를 돌아다니는 중죄인도 잡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동안 이근안을 못 잡은 것입니까, 안 잡은 것입니까? 그동안 정부 주장대로 못 잡은 것이라면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도청과 감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근안과 같은 중죄인을 대상으로 감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도청과 감청의 불안 속에 살아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중죄인이 버젓이 정상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근안에 대해 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했다면 그 결과물, 안 했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치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시키기 위해 먼저 장관이 이

근안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영화는 산업이기 이전에 정신문화의 표현수단입니다. 한국영화의 존립을 보장해 줄 스크린쿼터제는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방어수단입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제를 협상의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고 협상의 본질 그 자체로 보아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도 문화적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국문화의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도 스크린쿼터제를 예술창작품을 보호하는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는 한국영화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스크린쿼터제를 과연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20세기는 많은 시련과 갈등, 산업화에 따른 발전을 가져온 인류역사에 기록될 격동의 한 세기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세기의 종점에서 되돌아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서는 성실한 역군으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이 세대에 가장 존경받고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롭고 소외당하는 계층, 사회에 짐이 되는 불필요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 유교사상의 붕괴와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들은 갈 곳이 없고, 60세 이상의 실업자가 5년 전에 비하여 9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통계수치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노년계층은 평생을 부양해 온 가족들로부터, 그들이 평생을 일해 온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도의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이제는 노인문제를 진지하게 재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노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버산업에 대한 정책지원방안을 효과적으로 강구하여 일부 부유계층만이 혜택을 받는 실버타운 등 복지시설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이 더 이상 잉여인력이 아니고 사회적

경륜과 지식을 가진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들에게 일자리와 안식처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관은 실버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북 경주를 출신이신 임진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경주시 출신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입니다.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암울한 현실 앞에 누구를 향해 무슨 질문을 던지고 어떤 답변을 요구할 것인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현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난파선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 정권유지를 통한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현 정권이 그토록 차별화를 부르짖던 군사정권과 다를 바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공작과 회유에 의한 야당의원 빼 가기, 국회 529호 정치사찰사건, 8년치 야당 후원회 무차별 계좌추적, 논공행상·지역편중 나눠먹기식 인사, 국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도·감청 사건에다 더 보태서 선거용 제2건국, 이제는 언론장악을 위해서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해 온 현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번 언론장악문건사태마저 은폐·왜곡시키는 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대책문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문건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문건 내용과 최근 정국상황이 일치하고 있으며, 중앙일보사가 표적이 되었고, 국제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언론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는 기묘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가 어떻게 부인하려 듭니까? 정부여당은 국기를 흔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

작·날조 운운하며 역공작을 펼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식으로, 누구에 의해 이 문건대로 언론 말살정책을 했는지 밝히고,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문제만 생기면 어릴 적 친구들끼리 말다툼할 때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하는 좁쌀친구들처럼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톡하면 고소·고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년센스입니까?

청와대 공보수석, 정책기획수석, 무엇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는 국정원 언론단, 정부 내 부처 공보담당관 회의를 주재해 온 국정홍보처 등등입니다. 가히 인기에만 집착하는 인기홍보정권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크게 기여한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한다'고 했지만 이런 식의 언론간섭이나 통제가 계속된다면 그의 역설처럼 국민 모두가 신문을 읽지 않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울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언론사들은 권력과 정권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IMF 이후 모든 기업이 자금압박을 받았고 언론은 더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98년 기준 신문사 부채현황을 보면 10대 일간지 부채가 2조 2430억 원에 달하고, 4개 경제신문사가 3051억 원, 지방 종합일간신문 26개 부채가 5775억 원 등 총 3조 124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10대 일간지 중 유일하게 한겨레신문만이 10.22% 증가한 480억 원의 신문 수입을 기록했으며, 10대 일간지 중 50%인 5개사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중앙일보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유일하게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사실입니다.

또한 4개 경제지는 전부 적자운명을 하고 있으며 26개 지방 종합일간신문사는 광주일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을 뿐 나머지 24개사는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해 문건내용처럼 정권은 얼마든지 언론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약점으로 인해 언론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무상태를 빌미로 언론을 간섭하려 든다면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총

칼을 앞세운 언론간섭이나 통제와 무엇이 다르게 있습니까?

실제로 현 정부가 공적기여금 운운하면서 기사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인사권 개입 의혹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언론탄압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이 광명천지하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탄생 전부터 거짓말 정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늘게 되는 것입니다. 집권하자 곧 이회성 씨를 구속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복수정치가 시작되고 또 좀 전에 발언하신 추미애 의원의 발언 중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3월에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정형근 의원이 언론장악문제를 폭로한 이후 국세청이 그 시기를 조작, 거짓 증언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거짓말들입니다.

이 땅에 국민이 있고 진정한 언론이 있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한 소수 위정자에 의해 민주주의는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기도들을 사전에 인지하셨는지요? 인지 못 하셨다면 총리로서의 책임감도 의식하셔야 된다고 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전담하는 언론의 자율성, 독자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묘한 방안은 없으신지요?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동강댐을 건설하느냐, 강을 보존하느냐는 문제를 근 2년 동안의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건설교통부가 댐건설 예정지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러한 혼선은 환경시민단체의 반발과 수몰예정지 주민들의 상경 농성, 강원도지사, 평창군의회, 강원·충북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확산되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댐건설을 시사했다가 다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댐을 건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으로 정책혼선을 부추겨 왔습니다.

과연 이 정부에 일관된 환경정책이 있는지, 환경철학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대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생태계에 관한 현대성의 한계를 위기로 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적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생태계 위기는 단순히 자연환경의 위기가 아니

라 우리가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의 위기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동강 일대를 직접 탐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동강댐 건설을 일단 유보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동강을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총리께서는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동강댐 건설의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발족했던 공동조사단이 정부의 일방적 운영으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우리는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옛 소련 우크라이나공화국 수도 키예프 북방에 위치한 체르노빌원전의 참혹한 폭발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체르노빌원전 폭발사고로 수십만 명의 인명이 죽어 가고 아직도 수백만 명이 암과 백혈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그곳은 13년이 지난 지금도 죽음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체르노빌원전 폭발사고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금년 10월 4일 오후 7시 10분경에 발생한 월성원전 3호 중수누출사고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느낍니다.

총리!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대규모의 원전 건설계획이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원전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구소련, 인도,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그런데 OECD까지 가입한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무려 35조 원을 투자하여 18기의 원전을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원전 건설계획과 비교해도 많은 숫자입니다.

총리!

지난 10월 4일의 월성원전 사고를 봅시다.

원전의 운영주체인 한전 핵심부가 사고소식을 25시간 20분 뒤에야 그것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고채널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 과학기술부 안전기술원의 주재관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재관은 감

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재관이 일기예보와 같이 기분이 좋으면 사고를 덮어 주고 기분 나쁘면 1건씩 터뜨리는 구조 속에서 원전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허술한 주재관 보고체계를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어떻게 이 한 사람에게 수백, 수천만의 안전을 맡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사고가 난 월성원전의 기종인 가압중수로로 97년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사가 7기를 폐쇄하고 19기의 추가건설계획을 취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캐나다가 이런 소란을 벌이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가압중수로를 일컬어 근본적인 설계결함이 있고 가동 중 잦은 고장과 안전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심장병에 걸린 마라톤선수라고 비유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문제의 가압중수로에 대한 실태 조사는 했습니까? 문제점 보완책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정부는 기회만 되면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국민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경쟁력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전정책에 있어서는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것은 외면하고 중국, 인도, 옛 소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핵연료 가공회사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해 일본정부는 JCO의 면허를 취소하고 검찰에 사고원인 수사를 지시하는 등 확고한 책임규명의지를 보였고, 캐나다의 경우 중수누설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원전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원자력 전문가들과 공동조사를 벌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자 아직까지도 재가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규명 없이 재가동 없다는 캐나다정부의 국민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명인 것입니다.

총리,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안전성에 대한 홍보에는 열을 내면서도 안전사고 내진설계 등의 공개와 관련한 원전 투명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내진설계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덧붙여 국내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일면 원전 자체보다는 투명한 사고 공개와 정확한 보고체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성원전 사고 조사에 내려간 팀에도 전문가가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거부하여 참석을 하지 않았고 현지 시의원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또 한 가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목 놓아 외치면서 세계적 문화유산인 문무대왕 수중릉 500m 앞 봉길리 지역에 신월성 1·2호기를 60만 평의 대지 위에 추가 건설하여 핵단지화한다는 계획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문화총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총리께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1923년 광둥 대지진으로 14만 명이 사망하고 가옥 56만 채가 파괴된 20세기 최대의 지진과 95년 6000여 명이 사망한 고베 대지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97년 21건, 98년 32건, 99년 9월까지 34건이 발생했습니다.

총리,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행기로 불과 1시간 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의 대지진과 같은 재앙이 들이닥치지 않는다고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총리, 지난 8월 17일 발생했던 터키 지진과 9월 21일 대만 지진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터키보다 더 도시밀집형인 대만은 1500여 명이 사망하고 터키는 1만 5000여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대만은 내진설계가 그나마 되어 있었고 터키는 녹슨 철골 등 부실자재를 사용한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총리,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입니까? 지진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은 자연 현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조절·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진이 닥쳐올 때를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진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

까? 지진은 고사하고 그냥 있는 다리와 건물도 무너져 내려 가는 나라 아닙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엄청난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댐 등은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정밀검증이 필요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동강댐 건설 예정지의 경우 영월, 평창, 태백, 정선지역은 지난 78년 이래 총 18회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 96년 12월에는 규모 4.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한 동해안을 따라 고리, 월성 등 원자력발전소가 분포한 지역에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진대 위에 건설한 원자력발전소와 댐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진 발생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전쟁에 대비한 민방위 대책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정치력이나 외교력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 발생 시 지금과 같은 민방위본부에서 마련한 지진대비 국민행동 요령은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수준으로 그것마저도 국민들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민방위 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일본처럼 톱다운(topdown)식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부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먼 후일 사고가 난 후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본 의원의 이 간곡한 충언을 기억할 것입니다.

경부고속전철 대구-부산 기본노선 건설과 관련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98년 추경예산 155억으로 설계비 125억, 용지보상비 30억을 집행, 대구-부산 기본노선의 설계가 완성되었으나 99년 예산 200억 중 90억만 집행, 110억 원은 2000년도로 이월시킴으로써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천억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면서 국가 기간산업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마저 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현 정부는 주장대로 IMF 위기탈출과 경제여건이 좋아졌다면 착공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길 필요

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같은 여성 지역구의원으로서 추미애 의원을 남달리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조용하셨던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 어찌다가 실수로 용어에 대한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회의원 하는 것만 해도…… 한 사람이 일국의 헌법기구입니다. 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3000만 대한민국 여성의 품위와 위상을 위해서라도 추미애 의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나오셔서 사과발언을 하시는 것이 뒷마무리가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충언 드립니다.

우리 여성의원들은 국회에서 그래도 조용히 우리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정화기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뜻에서 본 의원이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제 말에 찬성하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규 다음은 서울 영등포 갑구 출신이신 김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김명섭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를 상대로 국민 민생현안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회의 기능이 괴문건의 폭로라는 해프닝으로 말미암아 정지되는 구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설과 의혹제기로 공작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등 참으로 가슴 답답합니다.

소위 언론문건 소동의 진실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강래 전 수석과 이종찬 부총재가 문건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억지주장은 완전 허위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 그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마는 불확실한 괴문건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정국을 혼란시킨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 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물어 가는 1999년, 우리는 역사적인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새 시대의 국가과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건설에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고 복지재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복지구현에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선의의 경쟁, 정책순위와 실천을 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첫 과제는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다행히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당면과제 속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생산적 복지모델과 국민과 함께하는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복지국가의 첫 번째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경륜의 지도자이신 국무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21세기 복지국가 모델은 무엇인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가는 중산층의 육성과 서민생활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IMF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서민들입니다. 98년 이후 근로자 평균 실질임금은 9.3% 하락했습니다. 서민층의 소득은 17.2%가 줄었고 중산층 역시 2.8% 감소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월평균 소득 격차는 97년 620만 원에서 98년 988만 원으로 60% 이상 늘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서민층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고 향락사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의 결과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듯이 경기회복의 열매도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서민·중산층 종합대책을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경제정의 실현으로 분배구조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중산층 육성과 서민층 보호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의 실업률은 4.8%로 IMF 이후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경기회복으로 아랫목에서 윗목까지 훈훈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안정은 경제구조의 완전한 체질개선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우문제와 투신사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등 파장이 큰 구조조정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따른 실업대책만으로는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IMF 이전의 2%대 실업률 회복은 어렵고 저성장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00년 실업예산을 보면 장기적인 고용안정이나 고용창출 노력이 부족합니다. 규모도 99년보다 52%가 삭감되었습니다. 임시구호적인 실업대책에서 벗어나 만성적인 고실업에 대처할 고용정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률 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실업률에는 실망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등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은 9.2%,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단시간 노동자까지 합하면 실업률은 11%까지 올라갑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참가자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하면 실업률은 9월 현재 6.7%가 됩니다. 결국 통계상의 문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실업예산의 재검토와 실업통계방식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대책은 단기적인 실업대책에서 장기적인 빈곤대책으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은 경기회복 후에도 상당기간 빈곤층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내년 정부예산에는 한시적 생활보호,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는 현실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예산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취약계층 지원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총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평균수명이 75세로 늘어나 65세 이상 노인이 전인구의 6.8%인 3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0년은 7%, 2022년에는 14%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계층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대책이 조속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로연금 혜택 노인은 66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20%에 불과하고 금액도 생활보호대상자 월 5만 원, 저소득 노인은 월 2만 원입니다.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도 난방비용의 5분의 1 수준인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노인의 건강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50% 이상의 노인이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치매노인이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두세 곳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대책은 무엇입니까?

고령화사회와 함께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제도가 국민연금인데 그 필요성이 아직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우수성은 수익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월 소득 73만 원인 사람이 10년을 불입하고 60세부터 15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납부보험료 총액은 590만 원이지만 수령연금은 5800만 원이나 됩니다.

민간상품보다 2배 내지 4배 많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수급권을 가지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도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장수단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장점이 홍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의 국민이 납부 예외자로 남아 있습니다. 연금이 정말로 필요한 사회빈곤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조기정착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영자의 소득과약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노력으로 평균 신고소득이 89만 6000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직장과 농어촌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 124만 원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정착과 내실화를 위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의료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의료보험통합의 논쟁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98년 10월, 227개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의 통합 후 전산오류와 시행준비 소홀로 60만의 민원대란을 겪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로 예정된 140개 직장조합의 통합을 6개월간 연기한 것도 직장노조를 비롯한 한국노총의 반발, 하위법령의 제정, 자료준비기간의 문제로 민원대란의 소지를 안고 있기에 6개월간 국민합의와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정부의 용단 있는 조치로 보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직장의보 통합 연기가 총선을 의식하여 여당을 편들어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통합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재정통합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보험 확대의 핵심과제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성공적인 통합작업과 의료보험의 확대를 정부의 용단이 정치성 없는 국민복지 확대 차원이었음을 분명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영자 소득과약의 조기 실현으로 적정 부담 적정급여 체계수립과 재정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실시됩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 항생제의 다량소비, 보험재정의 문제, 의료기관 비리척결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있기에 관련단체 간의 충분한 논의 속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인식 또한 성숙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약분업의 성공은 국민이 장점을 이해하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몽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약분업 시행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밝혀 주시고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사망률 1위 요인은 질병이 아닌 사고사입니다.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 15만 900명이 사망하고 435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1개의 중소도시 인구가 사고사로 사라진 것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무려 143조에 달합니다. 98년 한 해만 해도 1만 2300여 명의 인명손실과 부상자 39만 5000명, 2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많고 피해규모가 큰 것은 지난

30년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과 국민의 안전의식이 낮기 때문입니다. 사 고왕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 주도로 안전사 고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무총 리,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애아 특수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수교육 투자수준은 OECD권고안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특수교육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지 의문이 많습니다. 교육부장관, 특수교육5개년계획의 내용과 실천방안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노동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 후 7년간 2000억 원을 사용하고도 순증 인원은 1500여 명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무고용률은 0.46%에 불과하고 이직률도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원리에 따른 단순알선이 아닌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직업재활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국회에서 제안한 장애인 직업재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합니다.

22개 정부부처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는 부처는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민간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은 미이행분담금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우선 채용을 비롯한 정부내 의무고용 확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체가 정착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영역도 넓어져서 국민의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지방의원들은 무급 명예직이라는 원칙에 묶여 현재 광역의원 월 60만 원, 기초의원 월 35만 원, 내년 1월 1일부로 예정된 활동비 인상안도 아주 미흡한 지경입니다. 근본적인 예우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건강사회의 원천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의 증가는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8년 하루 평균 1000쌍이 결혼하고 340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한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일본,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가정해체의 심각성은 사회문제로 연결됩니다. 현재 5800명의 노숙자 중 80%가 가족이 해체되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결손가정의 청소년 보호 문제, 모자·부자가정의 증가 등 사회병리현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정보호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복지 개념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경수로사업, 식량·비료지원 등 대북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햇별정책에 따라 민간지원도 활발해졌습니다.

북한은 식량난 외에 보건의료관련 인프라가 마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0%의 어린이가 만성 영양결핍 상태에 있으며 1000명당 영아 사망률 19%,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 사망률은 1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염병의 만연으로 결핵 사망률은 세계 최고이며 말라리아도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남북교류와 통일이 앞당겨진다면 난민과 함께 전염병의 확산으로 수십 년간 쌓아 온 보건방역체계가 일시에 붕괴될 것입니다.

통일을 대전제로 건강한 북한인을 만나야 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대북 의료사업 지원 계획을 총리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사업과 연계한 의료지원대책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파악을 위한 정보기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동포는 1000명이 넘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입국자 251명 중 직업생활자는 62명에 불과합니다. 관심과 지원의 축소로 사회에 적응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탈북동포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총리께 묻습니다.

해외체류 탈북동포의 실상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 내에 3만 명, 러시아에 2~300명의 탈북자가 은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외체류 탈북동포 지원대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 대책을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식탁에서 국경의 개념이 무너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국제 위해정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 이후 환경호르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환경호르몬 관리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 '98년 한 해,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 작물이 콩 60만t, 옥수수 150만t이 수입되어 우리가 먹고 있는 빵과 과자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해식품관리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로 나누어져 효율적인 대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조정으로 식품관리를 선진국처럼 단일화해야 하며 단기적으로 총리 산하에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간 업무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은 반드시 난관과 도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건설은 땀과 눈물로 이룩한 경제성장이며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착보다 더 많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부터 구시대적 정쟁의 유산을 버리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다음은 강원도 동해 출신 최연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희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강원도 동해 출신 최연희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새 천년을 60여 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냉철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 과연 그러한 꿈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15대에 들어온 초선의원입니다. 그런데 본회의 때마다 소리 지르는 분들이 초선일 경우는 덜 배워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재선 이상 분들이 더불어 발언자한테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

는 일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자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저 자신도 좀 나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당의 정형근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한 소위 언론대책문건, 일부 언론제압기도문건이라고 합시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드러난 사실을 기초로 해서 문일현 기자와 중앙일보 간부와와의 통화 및 회견내용을 종합했습니다. 가능하면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과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현재 국민회의 부총재 이종찬 씨가 국정원장에서 지난 5월 26일 퇴임하고 1개월이 지난 6월 20일,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다가 사비로 중국유학 중인 문일현 기자에게 정국현안 및 언론대책에 대한 조언을 요구하여 문 기자가 그 문건을 작성, 6월 24일 팩시밀리를 이용, 사진 3매와 함께 이종찬 씨 사무실로 송부한 사실, 문일현 기자는 그 문건 작성시 중앙일보 간부와 사전 상의한 바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사실, 그 문건은 이종찬 씨 사무실 이외의 곳에는 보낸 바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문건의 주요내용과 실제상황과 대비해 보면 위기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조선·동아·중앙 등 빅3는 현 정권에 대한 건설적 비판세력을 자임한다는 표면적 명분으로 현 정권의 노출된 약점을 최대한 공격해 정권의 힘을 약화시킨 후 궁극적으로 현 정권에 우위확보를 꾀하므로 16대 총선 일정 등을 감안, 8월 이전 조선·동아·중앙일보에 대해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청와대·안기부·검찰·경찰 등을 총망라해 탈세·부당내부거래 등을 집중 조사하여 인적 청산 등 충격요법으로 반DJ 정서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 내용은 중앙일보에 대한 6월 29일 국세청 세무조사, 9월 17일 검찰의 중앙일보사장 구속, 10월 초 공정거래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으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현실화된 사실, 그리고 동 문건의 입수경위에 대하여 정 의원과 문건 전달자인 평화방송 이도준 차장의 발언내용에 따르면 이도준 기자가 전 국정원장 이종찬 씨 사무실에서 입수한 사실, 이 기자는 평소에도 이종찬 씨 사무실에 자주 들른다는 사실,

이 기자는 이종찬 씨 사무실의 주요문건을 들추어 볼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되는 사실 등이 인정됩니다.

비록 이종찬 씨는 보좌진만 봤을 뿐 본인은 이 문건을 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에서 팩스로 송부된 이 문건과 더불어 사진 3매가 첨부되었다는 사실을 기초로 볼 때 보좌진만 그 내용을 보고 보고조차 받은 사실이 없거나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제 나름대로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작성경위와 그 내용의 현실화 등을 종합하면 이종찬 국회의 부총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정국타개방안 수립이고 이것이 어찌면 이종찬 씨의 부총재라는 상당한 지위, 전 국정원장이라는 지위, 현재도 국회의 소속 최고 간부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일용 상부에 보고되고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단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동 문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법이 동 문건이 포함하고 있는 진실을 얼마나 규명해 낼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지워 버릴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한다고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을 잘 들으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국정조사한다고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 보시라고요. 이 내용이 어떤 취지인지……

지난 옷로비 의혹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서 드러난 현행 국정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결국 진실규명에 실패하고 특별검사까지 도입하는 불행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여당을 비롯한 이종찬, 이도준, 문일현 씨, 정형근 의원의 진술내용도 모두 의견이 상당부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실체규명이 국민의 의지와는 달리 축소와 왜곡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께 묻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건과 관련, 불행하게도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현행법 상황에서 명확한 실체규명을 위해서는 오히려 검찰에 정치적 영향이 가해지는 것보다는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검찰도 지키고 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

이 어떤지 하는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이른바 국민의 정부에서 새삼 국민의 기본권침해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기업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마저 도·감청의 불안감으로 전화 한 통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민주사회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기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정부라고 하면서도 졸속·부패행정으로 인하여 매년 장마 때마다 반복되는 수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가 아닌가 하는 확신마저 갖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처 간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입법정책의 혼선,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로 야기된 국민의 혼란과 갈등은 무엇으로 변명할 것입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면한 현안과 민생문제는 뒤로한 채 야당 사찰과 총선 대비 득표전략이라는, 이러한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 온 국민은 마치 권력의 들러리를 선, 소외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 시절 소선거구제만이 구국의 길이라며 장외투쟁도 불사했던 현 집권당은 돌연 중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회의 강령에서조차 ‘중·대선거구제는 당내 파벌 성행, 막대한 선거비용, 정국의 불안정과 신진인사 진출 제약 등의 폐해가 심각하여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폐기한 제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수십 년간 유지한 중선거구제를 94년에 소선거구제로 전환한 일본의 예에서조차도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야당에서 집권당으로 변신했다고 정치적 기본 소신마저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집권당의 주장과는 달리 중선거구제는 오히려 인근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화로 소지역 이기주의의 폐해로 인해 더욱 심화된 새로운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오로지 정략적 목적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0일 재·보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29명 중 17명이 공동여당 소속이었으며, 특히 6·3 재선거와 관련, 일반인 대상 8건을 제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17건 가운데 공동여당이 13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대 총선과 관련, 9월 20일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875건이 적발돼, 지난해 74건의 12배를 넘고, 그 대부분이 여권 측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불법·타락선거는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떠합니까? 사랑방 좌담회, 동특위 구성 등의 증거와 50억 불법선거자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3월 30일 재·보선과 관련된 검찰조사는 의혹만 남긴 채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후보가 이기면 적당히 넘어간다는 고정관념을 반드시 깨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의 공명성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선거법 위반 사범을 철저히 단속해 불법·타락선거 방지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선거사건을 기피하고 침묵함으로써 불법선거의 공범자라는 기막힌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진정으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법 집행을 공정히 행할 때 모두가 두려움과 함께 존경심을 가지고 그 집행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한 장관의 소신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법무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

16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전국 곳곳의 여권 지구당 위원장들이 청와대 관광을 빙자하여 버스를 동원한 단풍놀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실상을 점검하고 단속한 사실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확인해 볼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지상을 장식했던 ‘안심하고 통화해도 좋다’는 내용의 광고는 우리나라 정보화의 수준과 민주화의 질을 가늠케 하는 기막힌 광고 전략이었습니다. 인권을 유달리 강조하는 현 정

부가 오죽하면 이런 광고까지 내야 할 형편입니까?

사실상 불법 도·감청 문제는 인권보장의 척도로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제도남용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대통령께서는 모 방송국 창사기념식에서 ‘요즘 불법도청, 경찰의 정치사찰 등 인권침해를 한다는 말이 있으나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작년에 비해 불법도·감청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그리고 특별검사까지 도청방지 장치인 비화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일반국민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정부는 엿듣지 말아야 할 개인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엿들으면서 반드시 들어야 할 국민의 진정한 소리는 감청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소리를 총리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총리! 대통령은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도·감청이 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동일한 사안을 몇 번씩이나 지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정부 소관부처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여나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이 이렇게 빨리 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도·감청이 사실상 마구 행해지고 있기에 장관들조차 더 이상의 통제가 불가능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함께 불법도·감청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차별적인 금융계좌추적과 삼부파이낸스사와 관련하여 검찰권남용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올 8월까지 계좌추적 건수는 12만 8783건으로 작년 1년치의 92.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영장으로 실시한 경우가 90%나 되며,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기각률은 0.9%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와 법원의 영장남발에 의한 계좌추적의 오·남용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정치자금모금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포괄적 압수·수색영장으로 무차별적으로

모든 후원금 계좌를 뒤진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불법적인 계좌추적이 야당 사찰의 수단으로 이용됐음이 밝혀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산 삼부파이낸스의 양재혁 회장의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가 사건의 실체와는 상관도 없는 부산지역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여부를 집중 추궁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장관! 이렇고도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을 지키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집권세력의 전위부대로서 합법절차를 가장한 야당탄압의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들의 실체와 불법적 계좌추적 남발 및 야당인사에 대한 편파적 검찰권행사 방지를 위한 확고한 장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경기·강원북부지역 등 중부일원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이제 세인의 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수재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과주, 연천, 철원, 문산, 동두천 등 상습수해지역의 경우 96년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올해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해마다 같은 지역에 같은 원인으로 반복되는 수해는 결코 천재일 수 없으며 인재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재발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한 일도 대체 무엇입니까? 고작 중앙재해대책본부가 피해상황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수준의 활동이 전부 아닙니까? 또한 수해지역에 매년 지급된 재해복구비는 도대체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양평경찰서가 밝히는 건설업자·하도급업자·군청공무원 관련비리 커넥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해복구공사를 따낸 건설회사 대표가 무면허건설업체에 헐값으로 하청을 주면서 대부분의 공사비를 착복하는 류의 범죄에는 항상 관련공무원의 목인이 뒤따랐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번 수해를 어떻게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결산심사 법사위에서 왜 검찰권을 발동하지 않느냐고 법무부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10월 28일 검찰권이 드디어 발동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철저히 그 진상을 가리도록 해 주시고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부 입법정책은 편법과 부처이기주의로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원입법의 경우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사례가 늘어나고 입법 후라도 정부부처 간의 입장차이로 각종 개혁법안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장애인직업재활법안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총리! 집단이기주의를 우려한 정부의 책임회피가 이러한 입법정책혼선에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며 관련부처의 기득권 싸움 때문에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업무지휘·조정권을 발동하여 입법과정에 나타난 부처 간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정상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물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에 형평을 기하고 사회보장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내년 1월 시행예정이었던 의료보험통합은 정부 측의 원칙 없는 편의주의에 따라 그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의료보험통합을 다루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올 1월 정부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법안입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법사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쌍방의 견해를 절충해서 현재 여권에서 주장한 법안내용과 유사하게 의결까지 해 둔 법안을 여권 측에서 강행처리한 법안입니다.

의료보험통합을 다루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올 1월 정부여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을 내놓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벌이는 등 원칙 없는 졸속처리와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혼란을 가중시켜 보험료 납부 거부 서명인원이 급기야는 500만 명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아무런 공론화과정도 없이 준비부족의 이유를 내세워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인 6개월 뒤로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연기 이유는 단지 핑계일 뿐 총선을 앞둔 정

부의 책임회피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날치기통과까지 감행했던 정부의 강한 개혁의지는 어디로 가 버린 것입니까? 6개월 연기라는 것이 의보통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의료보험통합은 대통령의 의지이자 대선 공약이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의보 3곳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의보통합 반대여론을 흡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장관의 소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의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개혁의 폭풍이 몰아치고 간 자리에는 정책남발, 부실, 부패라는 허전함만 남기고 정치 불신의 깊은 골이 쌓였습니다.

포장만 요란한 정부시책보다는 국민훈장을 반납하고 이민을 결심한 한 어머니의 절규와 행정관료주의에 치인 말단 공무원의 자조적인 일기에 공감하면서 정치권에 등을 돌린 국민 앞에 우리 모두 크게 각성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새로움과 희망의 상징인 21세기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디. 그 시작을 향해 희망의 뜻을 달고 향해가기엔 우리의 리더십엔 부족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과잉충성은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기초로 할 때 새 천년의 시작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수고하셨습니다.

최 의원은 다선의원들은 고함을 안 지른다더니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대. 고함은 좋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15일까지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의결정족수가 모자라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당 대표의원께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의원회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들은 곧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원되기까지 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구 출신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강서갑 출신 신기남 의원입니다.

일제 식민지로 출발한 우리 민족의 20세기는 위기와 극복의 길이었습니디. 20세기 막바지까지 찾아온 국가부도의 위기도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디.

이제 위기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가 경영전략을 모색할 때입니다. 두 달 후면 시작될 새 천년은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특히 문화창조력은 한 나라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역량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1세기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문화창조력의 제고를 위해 문화의 세기를 향한 국민 대장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는 검열과 규제 대상이었을 뿐 제대로 보호·육성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실로 문화를 보호·육성하려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입니다. 이는 2000년도 문화분야 예산안이 사상 최초로 1%가 넘게 편성된 것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순수문화예산 1%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총리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산 1%는 문화대국으로 가는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문화인프라와 문화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취약합니다. 중앙정부 문화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 1인당 문화예산액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15달러가 됩니다. 2000년 예산안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 29달러, 프랑스 46달러, 캐나다 71달러, 이것은 모두 95년 기준인데 이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한 각 나라별 전체 공공부문 문화예산, 이것은 중앙정부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예산 또 공공기

금을 다 합한 것인데 이 공공부문의 국민 1인당 문화예산을 살펴보면 독일 128달러, 캐나다 153달러, 프랑스 226달러로 이것은 93년 기준인데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0년 예산안에 의하더라도 30달러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이 지극히 미비한 데다가 민간부문의 문화투자 환경조차 전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중앙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기존의 문화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이 최소한 3% 정도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떨어진 수준을 극복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21세기에서 문화예산의 증액은 곧 경제에 대한 투자요 민족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문화대국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2004년까지 문화예산 3%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를 만들고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하며 전문 문화예술인을 등용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지원해 왔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문화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이 원칙이 지켜지고 관철되어야 하겠습니다.

문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행정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완전등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창작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발전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등급분류에 있어서 현행 등급분류제도는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는 사전검열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완전등급제의 도입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완전등급제를 실시하자면 당연히 등급 외 전용관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제가 문화인 3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의 87%가 완전등급제 따라서 등급 외 전용관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등급 외 전용관 도입이 포르노를 합법화하는 것으로서 저질 음란·폭력물이 판친다는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등급 외 전용관은 포르노 합법화가 아닙니다. 포르노영화는 형법상 음란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 됩니다. 아울러 등급 외 전용관은 자치단체장의 엄격한 허가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광고 비디오 출시를 금지 시킵니다. 이로써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완전등급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 등급 외 전용관 도입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족은 문화적 전통과 창의력이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납니다. 부존자원은 열악하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우리기에 문화산업을 21세기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번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전략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할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크린쿼터입니다.

국민의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육성정책에 힘입어서 한국영화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 대한 국민의 사랑도 높아져서 99년 10월 현재 한국영화 관객 수는 745만 명으로 관객점유율 35.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관객점유율 25.1%에 비해서 10%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 문화산업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모처럼 피어나는 희망의 징조 속에서 최근 스크린쿼터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크

린쿼터는 문화주권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문화산업의 시장질서는 무제한적인 자유경쟁의 원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적 예의를 존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이며 문화제국주의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올해 1월 5일 국회에서 채택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 유지 촉구 결의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방송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방송법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영상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방송정책·행정권을 정부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방송위원회로 이관하여 방송통제의 우려를 근절시킬 것입니다. 또한 위성방송을 조속히 도입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규제기구를 일원화하는 등 방송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방송법 이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방송개혁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학계, 방송계, 시민단체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번 회기 내 통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방송산업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도 무궁화 3호 위성까지 쏘아 올린 마당에 방송법 지연 때문에 아까운 투자비가 계속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당리당략도 방송법 제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간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통과 직전까지 왔었습니다마는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방송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방송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방송법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사태 그리고 언론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언론탄압이니 언론 길들이기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국민들을 혼동시키는 상황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분명합니다.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홍석현 씨의 구속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서 언론탄압과 관계가 없다는 견해에 국민의 64%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국민의 정부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 월간지가 일선 기자들을 상대로 역대 정권의 언론자유도를 조사해 본 결과가 최근에 있습니다. 일선 기자의 54%가 김대중 정부의 언론자유보장도가 가장 높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일선 기자들에게서도 국민의 정부에서 언론탄압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당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성역 없는 사회정의 구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이 언론간섭과 언론 길들이기로 호도되고 있는 이 사태의 실상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구체적인 홍보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앙일보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독재정권 시대의 언론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권력개입이 사라진 지금 언론개혁은 보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언론개혁은 재벌로부터의 독립, 사주로부터의 독립, 광고주로부터의 독립 등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언론통제라는 굴절된 역사를 거친 우리는 정부개입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개혁은 자칫 언론통제 시비를 야기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언론 앞에 선 한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그의 인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송법, 선거법, 정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법 규정을 통합하고 개선해서 가칭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한다든지 또는 언론피해구제 전담재판부 신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언론개혁의 방향은 무엇이며 여기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작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사태의 논란 증폭은 당리당략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적 공세를 펴 온 야당에게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형근 의원은 청와대 전 정무수석 이강래 씨가 작성했다는 피문건을 공개하면서 독재정권 시절에 유행했던 공작정치, 이 구습을 다시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피문서는 중앙일보 기사가 99년 6월에 작성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형근 의원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판명됐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의 정부를 언론탄압을 일삼던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처럼 보이도록 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이것은 세풍, 총풍으로도 모자라서 언풍으로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장내 소란)

이제 정치를 음모와 음해 술수로 가득 차게 만드는 공작정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공작정치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간 정형근 의원과 한나라당은 이제 밝혀 줘야 합니다. 이제 밝혀 줘야 돼요! 작성자가 밝혀진 마당에도 여전히 이강래 전 수석이 작성했다고 강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일개 한 언론사의 기사가 작성한 그 문건을 국민의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증거라고 몰아가는 그 주장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정형근 의원이 구성한 시나리오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 의원은 홍석현 씨가 대주주로 있는 보광기업의 탈세조사가 피문서대로 이행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내 소란)

잘 안 들려서 다시 묻겠습니다.

정 의원은 홍석현 씨가 대주주로 있는 보광그룹의 탈세조사가 피문서 내용대로 이행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광그룹에 대한 내사는 제보에 의해서 이미 금년 3월에 시작된 것입니다. 통상 제보 후에 3~4개월 내사기간이 필요한 것이니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6월 하순 날짜가 찍힌 이 팩스 문건에 의해서 탈세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어떻게 아직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정 의원은 2~3일 사이에 말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데 이왕 바꾸는 김에 논리적으로 모순된 이 부분도 이제 바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총리,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수사당국이 홍석현 씨 탈세제보를 얻고 또 수사에 돌입한 것 이것이 시기적으로 금년 6월 하순 문제의 문건이 작성, 전달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3~4개월 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총리가 한번 말해 보세요.

정형근 의원은 지금까지의 허위유포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사실날조를 통한 개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와 관계없는 것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여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펴으로써 국민을 현혹시킨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전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장내 소란)

총리에게 당부하면서 동시에 묻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한 점 의혹 없는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어 사건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잘 안 들려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계획을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지난 88올림픽과 더불어 한국을 전 세계 인류에게 알리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인 한국에서 평화월드컵을 성공시키는 것은 21세기 희망의 메시지로서 국위를 널리 떨칠 것입니다. FIFA도 2000년 5월 15일까지 시

한을 연장해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한 당국이 공동개최를 통해 평화월드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월드컵은 한일 공동개최입니다. 양국의 문화·국민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 평가 받는 자리입니다. 축구경기의 성적보다 우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평가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사회의 참모습과 멋을 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화월드컵·문화월드컵을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평화·문화월드컵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일 공동개최 시에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과 문화를 보여 주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균형 발전시켜서 온 국민과 함께 체육진흥을 이루려는 정부입니다.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지도교사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육예산의 적절한 배분도 필수적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21세기 체육발전의 비전을 국민들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입니다.

관광 이것은 종합산업으로서 모든 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총리 산하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진흥5개년계획을 보고 심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비전이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 이번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상·하반기 연 2회는 개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관광정책과 집행상황

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할 수 있도록 청와대 내에 관광비서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관광진흥확대회의의 정례화 그리고 관광비서관 신설, 이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관광대국을 위한 정부의 비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밀레니엄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종 행사들이 기획되고 준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몰, 자정, 일출행사를 비롯해서 평화의 공원 열두 대문 건립사업,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치면 무려 136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한순간을 기념하는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21세기 국가의 나아갈 방향, 우리의 미래의 희망 이것을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 밀레니엄 사업 이것이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과 함께 21세기 희망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뉴밀레니엄의 길목에 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총리가 갖고 있는 새로운 천년에 대한 비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국가운영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압축된 표현으로 진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결론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서 우리는 무엇보다 문화와 지식역량을 높이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안합니다.

21세기 국민의 정부 국정지표를 문화대국 건설로 세우고 전진해 나갑시다. 문화의 세기를 향한 국민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지금 한 10명 부족하신데 모두 좀 도와주세요.

다음은 경기 수원 팔달 출신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의원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시 팔달구 출신 남경필 의원입니다.

제 질문서가 미처 전달되지 못했음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뉴밀레니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생각하는 속도로 사회가 바뀌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뉴밀레니엄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천년을 맞는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새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거리의 노숙자로 남아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부채로 등이 휘어진 농어민들은 이제 다가올 WTO 뉴라운드 협상 소식에 주름살만 늘고 있습니다.

인권대통령을 자부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우리의 인권상황은 어떻습니까? 영국 옵서버지에 의하면 우리의 인권침해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칠레보다 못한 밑에서 42위로 아직도 후진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조사대상 99개국 중 50위를 차지해 아직도 뇌물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는 지난해보다 일곱 단계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지 결코 정권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가 내놓고 있는 거의 모든 정책이 16대 총선에 맞추어져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요정책들이 총선을 의식한 졸속 추진과 유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세기말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최고 통치권자의 거듭된 식언과 거짓말 그리고 무분별한 권력의 횡포입니다.

김 대통령과 현 정부는 한 손으로는 언론탄압과 원칙 없는 사정의 칼을 휘두르면서 또 다른 손으로는 2000년대의 장밋빛 전망을 우리 국민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신기남 의원님께서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과연 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될지 어안이 병병할 따름입

니다. 누가 반성해야 합니까? 바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시기입니다.

진심 없는 반성 없이, 또한 진실을 은폐하고 계속 거짓말만 늘어놓는다면, 또 권력의 칼만 휘두른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암울한 우리의 현실 뒤에는 총선과 정권연장에만 골몰한 일그러진 현 정권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총선지휘본부, 국무총리실은 총선연합부대, 청와대비서실은 총선돌격대, 국가정보원은 언론장악특수공작대, 국정홍보처는 총선선전·선동부, 문화부는 언론장악지원부대, 국세청은 언론압박선봉대라는 우스개 소리가 유행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할 것 없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오로지 16대 총선에만 골몰하고 있어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 박태준 자민련총재는 3각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선구체를 골자로 한 여당의 정치개혁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법안을 국회에 상정, 강행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자 신문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 합당, 신당 또 내각제 문제를 거론한 사실과 언론보도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김종권 비서실장은 대구, 김정길 수석은 성남·분당, 김한길 수석은 마포 갑, 박주선·서형래·이상환·김득회·장성민·고재방·박선숙 비서관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총선을 위해 강연을 한다, 사람을 만난다 하면서 수시로 대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비서관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청와대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대로,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비서관이 내년 총선을 위해 뛰고 있으니 가히 국민의 정부는 총선에 목을 맨 정부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에서 합당이나 신당 등 총선 논의를 모두 중단하고 모든 것을 정치개혁특위에 맡길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청와대 비서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모두 사직해서 자유롭게 출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보다는 대통령과 정권의 홍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출신들이 낙하산식으로 요직에 입성되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직원의 93.2%가 구 공보처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관리기능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정부정책의 대언론 홍보를 위해 신설되었다지만 실상 총리 산하 공보실보다 그 기능이 현저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국감 때 여당의원님들조차도 신랄히 비판했던 사항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과거 공보처의 직원 조직 그리고 과거 공보처 폐지의 주요 원인이었던 언론통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정홍보처, 정권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정홍보처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민단체들에게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총 15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시민단체의 존재가치는 바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신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준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선을 앞두고 제5의 권력으로 불리는 시민단체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난 10월 20일 주간 내일신문 11면 '경찰청 정보부에서 야당 스파이가 빼돌렸다' 하는 기사에 따르면 최근 여권에서 작성된 김 모 의원의 보험금 유치 파문 대책보고서를 입수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자료유출이 경찰조직 내부의 소행일 가능성을 점치면서 그 대

책으로 경찰청 영남지역 출신 간부들을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모계장 등 최근 인사조치된 경찰청 정보국 직원들 중 불만을 품은 경찰간부가 고의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 서울청장의 라이벌 측에서 차기 청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현 청장에게 도덕적 흠집을 내고 김 모 의원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내일신문이 보도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경찰의 시어머니로 불리는 김 모 의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문건의 실체를 밝혀 주시고 실제로 영남 출신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 역시 총선을 위해 경찰까지 사조직화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선만을 생각하는 이 정부의 무리한 욕심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은 이 정권의 언론탄압 행위입니다. 소위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현 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치밀하고 저돌적인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탄압의 선봉은 바로 청와대 공보수석이었던 것이 이번 중앙일보사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전 공보수석인 박지원 문화부장관의 경우 현 정권의 언론탄압의 실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위증을 서슴지 않았습니. 신동아 11월 호 최근 호 '깨어진 물컵의 진실'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박지원 장관의 지난 국감과 며칠 전 대정부질문 시의 답변은 명백한 위증과 허위답변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곧 있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문화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계서는 지난 해임건의안 표결에 앞서 내가 밟더라도 언론탄압 논쟁인 만큼 대통령의 체면을 보아서 부결시켜 달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부결 소식을 듣고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장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규 의장, 신상우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관의 표현대로 이제는 대통령의 체면을 생각하고 대통령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스스

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 중앙일보사태에 관한 미디어오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탈세와 관련된 흥 사장의 구속을 잘했다고 한 응답자가 약 64%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 신기남 의원께서 인용하신 바로 같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뒷 질문을 유념해야 됩니다.

흥 사장의 구속이 언론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언론자유를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8%, 저해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42.6%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시점이 중앙일보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내년 총선에서 승리만을 위해, 장기집권을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의혹들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그 진상이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규명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론탄압이 정권 핵심부의 치밀하고 음험한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언론말살문건의 진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문건이 대통령께 보고되어 실행에 옮겨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건이 작성된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벌어진 보광그룹 세무조사, 홍석현 사장 구속 등 일련의 사태는 이 문건의 내용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문건이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권력핵심부로 전해져 현실화되었음을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에 의해 작성되어 대통령께 보고되었고 이번에 폭로된 문건에 따르면 내각제 개헌문제, 8·15 경축사의 북한문제 제외 등도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지금까지도 언론탄압과 정치공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국정원장은 이번

문건사건과 관련 ‘보좌관만 받아 보았다.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문건의 앞의 인사말 3장을 포함해 문건은 10장이었다’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정형근 의원에게 언론말살문건을 전달한 이도준 기자는 전 국정원장 이종찬 씨와 막역한 관계로서 이종찬 씨가 이 문건은 이강래 씨가 만든 것인데 한번 검토해 봐 주기 바란다고 하며 넘겼다고 합니다. 이도준 씨, 이종찬 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앞서 진실규명 차원에서 언론탄압과 정치공작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개인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가칭 현정권의언론탄압진상조사를위한특별검사제법 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는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권력핵심부의 언론통제 진상이 낱알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지난번 옷로비 사건, 과업유도 사건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국정조사가 자칫 관련 증인들의 거짓말대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당 정형근 의원님이 지난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건을 폭로했을 때 여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정 의원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함께 정 의원님이 이 문건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이 정 의원님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을 한 여당의원님들께서는 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속기록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지난 25일 대정부질문 시 김형오 의원님의 정보통신부에 감청 관련 집행협조대장 제출거부에 법무부가 관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에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서는 감청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부처의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자료 공

개 여부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관여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정보통신부장관은 김 의원님의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정길 법무부장관과 의논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상을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 답변에서 거짓말한 사람은 해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는 미래를 향해 무섭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총선을 염두에 둔 최고권력자와 정부여당의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우울한 세기말을 맞고 있습니다. 총선을 위한, 총선에 의한, 총선의 정부가 아닌 진정한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정부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상우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 중 어제와 그제께 실시하지 못했던 경제에 관한 질문을 다시 실시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이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가까스로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잠깐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박상천·이부영·이금규 의원 외 288인 제출)

(18시22분)

○부의장 신상우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회의에서 실시하지 못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경기 성남 출신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의원 경기 성남 수정 출신 이윤수 의

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마치지 못한 경제에 관한 질문을 11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기 위해서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상우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8시25분)

○부의장 신상우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토요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장 신상우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출신 조한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천 의원 앞서 남경필 의원의 질문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젊은 초선의원에게까지 거짓말을 적어 주어서 발언을 하게 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싶지만 남경필 의원도 자신이 한 질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제 질문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서구 출신 조한천입니다.

은 국민은 지난 2년 동안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흘려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국민의 정부의 개혁에 동참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업과 구조조정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해 왔던 과정은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실업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과 생산적 복지가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했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촉진할 노사정 협력체제를 일궈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얻은 지혜를 살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참여와 협력 그리고 생산적 복지에 기초한 사회통합 실현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정의가 실현될 새 천년 한국의 꿈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광복절 축사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기조와 더불어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생산적 복지란 기존의 복지개념과는 달리 일하려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혼자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최저 생계비 이하의 국민에게도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수요자인 서민과 근로자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제정, 관련예산 증액, 세정개혁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실업대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8.6%까지 솟았던 실업률이 올해 9월에는 4.8%로 낮아지는 등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대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2년까지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밋빛 계획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단체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그 효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논의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공기업이나 산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탈북자의 실업률이 43%에 그치고 있고 취업자의 경우도 비정규직이 62%에 달하고 있어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 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신노사문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신노사문화는 노사가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현하고 과거의 낡은 의식, 관행, 제도를 선진화하여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사가 정부정책에 참여하고 근로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는 노사협력지원사업, 산업안전사업, 직업훈련사업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교육에 대한 노사의 참여를 위해 노동교육원을 노사정 공동의 노동교육센터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경영정보의 공유, 우리사주제도의 발전,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참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지식기반 시대가 본격화되면 노사관계도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의 노사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국의 신노사문화를 상징하는 노사정위원회가 법적 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고 3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는 노사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노동단체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노사의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와 실질적인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은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실적과 노사정위원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업종별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노사문제는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역의 노사정 주체들이 버스파업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사례는 지역별·산업별 노사정협의회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업종별 노사정협의회가 가동되면 중앙차원의 노사정위원회와 기업 차원의 노사협의회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는 지역별·업종별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간 교섭방식을 산업별 체제로 전환하여 교섭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산업별 체제로 전환하면 소모적인 교섭관행을 탈피하여 교섭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문제, 복수노조 체계에

따른 교섭대표권 문제 등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따른 처벌규정 삭제 문제는 산별체제 전환과 함께 꼭 풀어야 할 문제로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별체제 개편은 노동계의 자율적인 문제이지만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사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경제위기 속에서 약화되었던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별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많은 중·장년층이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퇴출되고 있으며, 일부 직장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경쟁의식과 피해의식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떠난 중·장년층이 사회적 활동 없이 소일거리나 찾는 현실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상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경험을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층에게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넓혀 주거나 젊은이들과 화합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불안요인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재해 실태를 보면 98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2212명입니다. 1시간에 한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어 가고 있는 것인데 이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치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발생한 총손실액은 국민총생산액의 1.6%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보다 5.3배나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98년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약 60%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대책, 그리고 제도 시행 이전의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경제발전이나 국제무역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국가나 기업의 환경투자가 매우 저조하여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국정기조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녹색국가 건설을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개발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지속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은 1972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할 국가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형태는 다르지만 133개국이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보전과 개발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없어서 개발에 대한 사회적 논란 등 국가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환경보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환경부문에만 국한되어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정부정책과 개발사업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설치가 절실한 것입니다. 총리는 국가지속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그 견해와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합리성이 담보된 정책 추진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해당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저감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오히려 개발사업을 동의해 주는 면제부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차원에서 우리 국토의 뼈대인 백두대간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남북으로 1400km를 걸쳐 있는 백두대간은 오랫동안 우리 국토의 상징이자 민족사를 껴안는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환경의 보고인 동시에 우리 고유의 역사와 생활문화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나 백두대간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 개념이 왜곡되었고 국토분단의 아픔 속에서 두 동강이 났으며 지금은 개발의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잘 보전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찾는 길이며 우수한 자연자산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백두대간 개념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보전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통일한국을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새 천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도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계는 여전히 남북을 이으며 유구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포용정책을 줄곧 견지해 왔으며 국내외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생태학적인 가치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의 추진은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 기업, 민간의 범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민간교류 차원에서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생태계 공동조사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북투자 기업들은 환경훼손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환경기술을 북한에 전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남북한 환경협력을 체계적으로 접근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이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으로 추진되는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남북한 생태계 공동조사사업과 환경협력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해인 악취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경인지역 악취 민원 건수가 전체의 74.4%에 이르고 있어 이 지역 악취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배출업체와 소규모 영세업체가 주택가와 혼재되어 있고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가스 영향이 크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지역의 악취 민원은 대부분의 광역시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악취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체계의 문제점이 감사원 등에서 제기되어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시도 간의 의견대립으로 2년 넘게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사 설립을 통한 일원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환경부는 자원화사업 차원에서 매립가스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자신 있는 수려한 자연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논리에 따라 환경보전은 뒷전으로 밀려 왔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의 편리를 위해 후손의 행복권을 빼앗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따라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새 천년의 꿈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인식을 바꾸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환경운동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교

육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초등교원의 정년단축과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올해 1만여 명의 교사가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부족하여 자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교육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직사회는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연금제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으나 그 효과는 의문입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원 사기진작 방안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무너지는 교실을 알고 있습니까? 수업 중에 양치질을 하겠다며 나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아이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교교육의 현실은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보편화된 현실이기 때문에 과감히 드러내고 사회문제화하여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원노조와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폭넓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멀리 통학을 해야 하고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실이 부족하여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거나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대책이 절실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교시설 현황과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새 천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노사정 그리고 국민 모두는 과

거의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고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한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래 왔듯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현재의 위기극복과 개혁완수를 위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국민은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21세기 생산적인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보다 넓은 마음으로 야당을 포용해야 할 것이며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이제 그만 하고 온 국민이 위기극복에 동참합시다. 여야 구분 없이 뜻과 힘을 모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튼튼한 다리가 됩시다. 21세기 달라질 한국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상우** 정부 측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종필**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말씀 경청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 여러 가지 다짐도 하면서 경청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김인곤 의원께서 정부부처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의무고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기관은 기능직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우선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취업희망자가 적고 국가기관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국가기관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채용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채용을 독려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정손에 대한 입학특별전형문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무이자 융자라도 해서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그러셨는데 정부에서는 수도사업에 대한 국가기능을 수자원개발과 광역상수도를 통한 원수공급에 한정을 하고 정수와 주민에 대한 급수시설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융자 이자율 인하 등의 다각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핵연료세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한전은 모든 발전소에 혹은 가동기간에 걸쳐서 전기판매 수입금의 일정부분, 1.12%입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주민복지,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450억 원이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특히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동 법률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국민보건 관련 사업을 통합해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국민건강관리센터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보건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행정기능을 전문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분산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언론문건과 관련해서 국민회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도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내각제 등 각종 공약이 파기되는 상황에서 언

제까지 같이 갈 것이냐, 언론문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건의하고 관련자 문책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김홍신 의원께서도 언론문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문책 건의 용의를 물으시고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는 작성자, 유출자 등 관련자들의 말이 서로 달라서 여야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회의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국민회의와 같이 갈 것이냐고 하셨습니다마는 이 정부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정부입니다. 끝까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혹이 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 지원과 검찰조사 등을 통해서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면 이번 사건의 성격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밝혀질 것이므로 책임문제나 내각사퇴 문제는 그때 거론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육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는 국가예산 전체의 배분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 국세에 통합되는 교육세는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보수교부금제도로 대체하고 지방세에 통합되는 교육세분은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재정 확보국가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위원회 구성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선 교육현장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일련의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교육이 당면한 위기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마련에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누구의 책임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교육여건 개선과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는 일에 합심노력을 해서 건전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교원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의 연세가 얼마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김 의원님보다는 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아직 해야 할 일을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체된 교직원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다는 교육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교육자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의 호응하에서 이루어진 국가적 결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년환원이나 조정문제는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교육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원수급과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문성 문제는 초등교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교사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없도록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교원을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인식해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의 사기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학년도에 새 대학입학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2002년 학년도 새 대학입학제도는 종래의 시험점수 위주의 전형방법에서 탈피하고 학생이 가진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전형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패한 교육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육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개혁의 성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그 공과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교육개혁이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면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생각입니다.

타 기관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와 덕성여대 이사장이 원래 직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관선인 한국외국어대 이사장은 임기가 99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차기 임시이사 선임 시 종합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덕성여대 이사장은 법인이사회가 선임한 이사이므로 동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성부나 여성처를 신설하고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등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성부의 신설을 현재 기능별로 편제되어 있는 정부조직체계상 기능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여성특별위원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여권신장과 남녀평등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부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문제는 기존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 정착되는 대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물으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었으나 IMF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서 정부출연금의 제대로 지원되지 못했고 민간기구 등의 조성 또한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회복과 더불어서 정부출연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고 민간출연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정부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산후휴가, 이것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 중의 급여를 외국의 예처럼 의료보험 또는 고용보험

등을 통해서 사회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비율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30% 이상 보장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참여 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언론에 공표하도록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인력을 적극 발굴해서 참여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 그리고 여성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결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박세직 의원께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문화 월드컵, 환경 월드컵, 관광 월드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표전략 청사진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완벽한 개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의 창의적인 문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장관회의 등 정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6월 경기장 건설, 관광진흥, 환경개선, 시민의식 함양 등 13개 분야별 정부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어김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월드컵 안전대책은 국가정보원 주관하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전대책은 참가국의 신변 안전보장, 안전 질서유지, 테러·홀리건 등에 대한 강력대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대책협의회와 지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 직전인 2001년부터는 관계장관협의체인 안전대책위원회의 실무대책기구인 안전대책통제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켜서 현장중심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정지역인 제주도에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와 같은 국제회의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제주도를 세계적인 환경의 메카로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시다마는 정부에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서 산성비, 황해오염 등 동북아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서 동북아지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등을 살려서 앞으로 동북아 환경 라운드와 같은 국제협력기구 유치 노력을 함께 벌여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깨끗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을 범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또한 전석홍 의원께서는 제2건국위를 해체하고 실천운동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두 의원님의 질문이 대략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정부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운동은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과거의 적폐를 시정하면서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1세기 민족 대도약을 이루자는 운동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2건국운동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제2건국비서실을 폐지하는 등 추진체계를 민간주도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실천과제도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개혁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운동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국민적인 의식개혁 운동이 되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특히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치성 배제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누차 강조하셨듯이 21세기를 향한 순수한 민간자율 실천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석홍 의원님께서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두 번째 문건에 총리가 내각제 연기를 제안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총리는 이 문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각제 연기를 건의했는지, 그리고 이 문건을 생산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고, 김홍신 의원님께서도 압수수색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기 이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좀 놀랐습시다마는, 이것은 저는 몰랐었고 또 내각제문제가 여기서 많이 거론됩니다마는 대통령선거 전에 양당이 내각책임제를, 앞으로 21세기는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같이 공조해서 이룩하도록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보니 여세가 모자라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특히 야당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으셨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무리해서 여기서 밀고 나간다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계속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말씀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전 회기에 제출했던 안건이 부결되었다 해서 다음 회기에 낼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또 들고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연기하자 해서 유보하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누가 하라 마라 이런 소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내려고 요새 한 이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각제 유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만큼도 보태고 빼지 않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 압수수색과 조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여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 의원님께서는 민간단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선심성 예산배분 등을 통한 관변단체화할 우려가 있는데 포괄예산 계상방식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금년부터 사업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금액, 심사평점, 사업수행 능력 등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배분·결정됐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사업별 지원방식에 따른 예산계상은 지원대상 단체를 당해 회계연도에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괄예산 계상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는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사회안전망에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인보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간 사회안전망 조직을 해체하고 새마을운동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민간 사회안전망 사업은 이웃의 소외계층을 지역주민 스스로 돕자는 운동으로서 현재 새마을운동단체를 포함한 140여 개 시민, 종교,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단체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문제는 당해 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많은 소외계층을 효율적으로 구호·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특정단체 단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민간 사회안전망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관계자 교육,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호는 사업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성금이나 물품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동팀을 존속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를 해체하거나 본래의 조직기능으로 되돌려 놓을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사과는 경찰청 직제상 수사국 소속으로 경찰청장 및 수사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국익에 관련되는 중요 범죄나 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첩보수집과 내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에 고위층 그리고 그 친·인척이 관련된 사안이나 청와대 빙자 사범 등에 대해서는 조사과에서 처리해서 그 결과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그 성격상 일반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경우에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크게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과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99년 9월까지 조사과에서 처리한 범죄첩보 처리건수는 총 176건으로서 과거에 비해서 건수가 좀 늘어난 이유는 정권이 바뀌면서 고위층 빙자 사범과 공직자에 대한 진정투서 등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과에서 처리한 사건 중 정치인 관련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를 고위 공직자와 고위층 관련 사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를 사퇴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도정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도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사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는 역시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석홍 의원 의석에서 — 사퇴권고라도 한번 하셔야지요?)

말씀하시는 것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에 추미애 의원님께서 제주 4·3 사건은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 아주 자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질곡 속에서 발생한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점을 누차 강조해 오셨을 뿐 아니라 지난 6월 제주 방문 시에도 이에 대한 의지를 직접 표명하시면서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유가족이 요청한 위령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4·3 사건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부로서도 적극 협조해서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사과문제라든지 역사 교과서 기술문제라든지 미군 군정 측의 자료협조 등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진상이 밝혀져서 모두 납득되는 데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제주도민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늘 질책을 주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 가지를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징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투기 추락사고 같은 것,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잘못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또 성과도 거양해 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또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국민들께서 걱정을 덜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거울삼아서 보다 내실 있는 국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정부가 잘못된 데는 질책도 주시고 또 잘하는 것은 격려도 해 주시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

탁을 드립니다.

소위 언론대책문건의 대책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하시면서 특검제 실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최연희 의원님께서도 검찰의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찰수사보다는 특검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문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검제도입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근안 씨를 안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답변이라고 질책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확대와 의료보험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들 정책은 21세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므로 설사 시행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에 따라서 이를 보완·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확대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득과약위원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건의에 관해서는 그 실시시기를 정부방침과 달리 발표할 경우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줄 우려도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관계부처의 의견을 감안해서 위원장이 대외적인 발표를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통합과 관련하여 세 차례나 법 개정안이 제출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사유는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질 없는 의료보험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2000년 시행에 맞추어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서 또 시행

연기안 등 세 가지 개정안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시 여당 단독처리와 시행 전의 개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차질 없이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통합관련 내부문건은 선거개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지적하신 문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법 개정 일정과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운영 등 제반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한 내부 검토자료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민원불편 등 국민부담을 걱정하는 실무 차원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가는 과정에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 적정급여와 적정부담 원칙 아래 부담능력에 의한 보험료 부과가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재정안정대책과 관련된 적자 인식,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제 혹은 약가인하문제 등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험법과 관련하여 시한적 보호대상자 축소문제에 관해서도 물으셨는데 내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비 지급대상을 54만 명에서 154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경기회복과 실업률 감소 추이를 감안해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당초 76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축소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예산이 3% 정도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앞으로 경기회복 정도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고서 필요한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외동포법 통과 이후 조선족과 고려인들이 반대집회를 열고 배신감과 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최초 입안 시에는 국적취득의 요건으로 혈통주의를 취해서 중국과 러시아 동포가 재외동포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혈통주의가 국제법 원칙에 반하고 외교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중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재외동포를 과거 국적주의로 수정 정의함에 따라서 법률의 해석상 중국과 러시아 동포의 대부분이 재외동포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동포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으며 같은 동포로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책을 현재 면밀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12월 3일 이날에 맞추어서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함과 아울러 취업기회를 확대해 주는 한편 불법체류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체류 탈북동포 지원대책에 대한 견해를 또 물으셨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부탁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소환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도 우리의 요청을 감안해서 대다수 탈북자들의 체류를 묵인하고 강제 소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탈북자문제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중국 측에 권유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문제는 중·북한문제 또 한중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인권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서 이 문제가 지나치게 공론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탈북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정부는 조용하게 그러나 효과적인 외교를 통해서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려인 난민의 수는 얼마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냐를 물으셨습니다.

92년부터 7년간 계속된 카자흐스탄 내전으로 인해서 동국 거주 고려인 중 약 8000명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으로 피난해서 난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공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을 통해서 정확한 고려인 난민 숫자와 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곧 실태파악이 되는 대로 정부의 가능한 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의 강제불임시술 실태 조사와 국가배상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강제불임시술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누구를 막론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런 강제불임시술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에서의 불임시술 그리고 국가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강제시술 그리고 보건소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로 보아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아서 전면적인 일반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지난 것들을 모두 역사속에 묻고 대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전면적인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 그리고 법 집행의 안정성 또 제반사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재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수도권 과밀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행정기능을 분리해서 행정수도 건설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남북통일 등 국가 장기발전 전반에 미치는 모든 영역을 심층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

립니다.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 수도권 대학에 대한 신설 그리고 정원규제를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 이전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학교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서 수도권 기존 부지를 토지공사 또는 성업공사를 통해서 우선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를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직자의 부패 근절을, 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21세기 환경변화에 걸맞는 우수인력의 유치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를 5년 이내에 연간 중견기업의 보수와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으로 금년 중 보수현실화5개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공무원 보수를 약 8 내지 10% 인상할 수 있도록 명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임진출 의원님께서 언론말살을 기도한 문건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몰랐다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다그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이 밝혀질 것입니다라는 저는 그것이 정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언론이 외부의 통제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되고 언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러한 언론고유의 영역이 손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월 동강댐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월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은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각계 민간 전문가와 환경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주관하에 정부 및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가 봤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아주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 갔습니다. 결론이 나오면 필요하다면 가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댐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먼저 최근 일련의 원전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의 안전운동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과 보고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임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정부도 금번 사고를 계기로 과학기술부 현장주재관과 원전사업자의 사고·고장보고 및 공개체계를 개선해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해서 유류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 원전은 해당부지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원전의 내진설계와 관련된 자료는 요구 시 항시 공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압중수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지도 물으셨는데 먼저 최근 일련의 원전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월성 중수로 3호기의 설계상에 중수 및 수소 누설, 미확인 용접부위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원전전문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원전안전관리기관 등으로 종합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에 관련된 제반시설의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 정책결정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이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외면하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정책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

다.

미국과 구주지역은 수자원도 많고 천연가스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거나 인접국가들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원 확보가 용이한 국가들로서 우리나라와 상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GNP에서 수출의 비중이 큰 불란서, 일본 등은 원전을 적극 건설 중인 점도 고려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원전정책이 개발도상국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전력수요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과 환경성, 에너지 안전성 이런 모든 것을…… 그런 차원에서 적정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라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임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문화유산인 문무대왕 수중릉 인근 봉길지역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길지역은 현재 가동 중인 월성원전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과학기술부 그리고 한전이 95년부터 3년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지질조건 또 공업용수 확보 이런 점에서 효율적이어서 원전 건설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아서 발전기의 위치가 결정되지는 않았습시다라는 설계 시 발전기를 문무대왕 수중릉으로부터 최대한 원거리에 설치하도록 문화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및 댐의 지진대책을 물으셨는데 한반도 전역이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원전과 댐은 이미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건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원전의 경우 부지 선정 시에는 반경 320km 이내의 과거 지진기록 그리고 8km 이내의 활성단층 존재 여부, 부지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시행하고 원전 설계 시에는 과거 원전 주변에서 발생한 최대지진을 기초로 내진설계값을 계산하고 이에 여유값을 추가해서 규모 6.5, 진도 7의 지진이 부지에서 발생하더라도 견뎌 낼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70년대 초에 건설된 소양강댐을 비롯한

모든 다목적댐과 규모가 큰 용수전용댐은 일본과 같은 수준의 내진설계를 해서 강진에 안전하도록 건설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79년에는 댐건설기준을 제정해서 모든 댐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댐 운영 중에도 댐체 내에 설치된 변이계 또는 지진계 등 수백여 개의 매설계기를 통해서 댐의 이상여부 자동체크 등 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일본처럼 튼튼한 식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들어 대만, 터키 등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초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재점검·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고 현재 관계부처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의 튼튼한 방식 등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포함해서 민간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재조직 정비, 민방위체계 개편 등 효율적인 재해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대구-부산 구간 기본노선 건설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은 이유, 2단계 사업 착공 시기를 앞당길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대구-부산 구간의 신선 건설은 98년 7월 기본계획 변경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04년에 착공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노선설계는 금년 말까지 마치고 용지는 연차적으로 매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집행이 지연된 것은 사업계획 재검토에 따라서 일시 중단되었던 노반설계가 98년 10월 말에 재개되고 용지매수를 위한 측량, 지장물 조사 등 사전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를 위한 노선변경으로 설계가 늦어져서 경주지역의 용지매수는 내년 상반기에 금년 이월예산 110억 원으로 착수하는 등 2004년 노반공사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21세기 복지국가모델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21세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근로와 연계시켜서 복지제도가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활력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모델을 정립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그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개발 노력과 더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서민·중산층 종합대책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정부는 IMF 위기극복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경감하고 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세계개편 등을 통해서 중산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잠재적 중산층인 서민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기회의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중산층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모든 저소득 국민의 생계·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임시구조적인 실업대책에서 벗어나서 만성적인 고실업에 대처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전반적인 실업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2%대의 낮은 실업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중기실업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조조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능력개발과 직업훈련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을 확충하고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고용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예산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예산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저소득

특층의 생계, 거주, 교육비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경로연금과 장애수당의 확대, 농어촌 어린이 보육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금년보다 증액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기초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납부예외자들이 소득신고를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제 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홍보를 보다 강화해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안전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안전사고와의 전쟁 선포는 정부와 국민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자는 충정에서 나온 고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이러한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관리법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난예방에 힘을 써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재난예방 수습, 복구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크고 작은 사고는 국민들의 안전의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가정, 직장,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과 연계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도 점차 높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가정해체의 심각성을 우려하시면서 가정보호에 대한 정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IMF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안정과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생활보호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노령화 그리고 소소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세기에 처해서 앞으로도 해체위기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혹은 보호 교육사업을 보다 확대·강화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각종 지원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대북 의료사업 지원 계획과 북한 보건 의료 실태과약을 위한 정부기관의 지원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보건 의료분야 지원 문제는 인도적 견지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노약자들을 위한 영양식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 보건 의료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북한에 농업개발 지원과 함께 보건 위생상태의 개선 그리고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구호도 이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남북협력기금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동포들의 사회적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탈북동포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 지난해 말 관계법규를 개정해서 초기 정착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정액 현실화한 바 있습니다. 사회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취업이 용이해지도록 직업훈련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일정기간 취업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병행해서 북한이탈주민 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종교단체 등 민간단체를 통한 물질적·정신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 기반 조성 에 역점을 두고 더욱 노력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체류 탈북동포 지원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서 외교채널을 통해 탈북자들을 인도적으로 보호해 줄 것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소환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중국도 우리의 요청을 감안해서 대다수 탈북자들의 체류를 묵인하고 강제 소환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탈북자문제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중국 측에 권유하도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문제는 중·북한문제 또 한중관계, 남북관계, 여권문제 등 요소들을 포함하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나치게 공론화될 경우 오히려 탈북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관련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총리실에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최근의 급속한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관련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관련부처의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예우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이고 자치단체 의결기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한 예우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희 의원님께서 중선거구제는 인근지역 주민들 간 불화로 인해 새로운 지역주의가 예상된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려 하는 총리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중선거구제든 소선거구제든 모두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학계에서도 각기 견해들이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논의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고비용 정치를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자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와 언론에 대한 압력행사의 정치적 의도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취재와 보도, 논평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사전검열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공보업무의 일환으로 언론에 대한 압력행사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상적인 공보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신중을 기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탄압의혹을 조사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언론의 편집권에 정부인사의 관여 문제가 언론사에 의해서 제기된 데에 대해서 총리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와 관련해서는 박지원 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 경위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문제는 여야 간에 논의할 사항으로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개인의 전화통화를 감청하면서 국민의 진정한 소리는 듣지 않는다는 국민의 소리를 알고 있느냐, 대통령께서 불법 도·감청에 대한 대책을 두 번씩이나 지시한 것이 권력 누수현상이 아니냐 이러시면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귀를 더욱 크게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 민생을 챙기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향후 국정수행에 유념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두 번씩이나 지시를 하신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불법 도·감청이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 권력의 누수가 있거나 도·감청이 장관들 조차 통제 못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또 그 절차에 따라서 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청의 남용 소지를 없애고 국민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청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감청 시간을 단축하며 감청 허가절차도 더욱 엄격히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 등 민간 사설업체의 도·감청실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따라 사설 신용조사업소 등의 불법 도청행위와 감청장비 불법제조 혹은 판매행위 등을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마음 놓고 통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현 정부의 입법정책 혼선으로 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정부는 각종 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의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정부 내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최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장애인고용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정부의 개혁의지가 혼선을 빚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 조정을 해서 개혁이 지연되거나 혹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기남 의원님께서 21세기 문화대국을 위해서는 2004년까지 문화예산 3%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문화의 창의력과 다양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의 세기로 문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문화분야 예산을 1% 이상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화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예술 기반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충분한 투자를 위해서는 문화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략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을 육성할 종합대책을 또 물으셨는데 정부는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금년 초에 문화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문화산업을 벤처기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문화산업진흥 재원 마련을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전략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문화상품의 해외진출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주권을 지키는 보루라고 하시면서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미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스크린쿼터는 문화적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 보호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영상산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러한 정부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와 방송법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새 방송법이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호소를 좀 드릴 것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언론개혁의 방향은 무엇이며 여기에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도 물으셨습니다.

이번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언론사 소유지분의 제한, 발행부수 공개 등 언론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논의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언론인·시민·언론단체·학계 등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해서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문제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최상의 홍보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을 통제한다거나 탄압한다거나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내역 분석 결과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서 3월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와 언론관련문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언론문건에 대한 수사계획을 물으셨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강래 전 정무수석이 지난 10월 27일 정형근 의원님을 고소하였고 중앙일보 측에서는 또 10월 28일에 이영일 국회의원의 대변인을 고소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우선 면책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관련자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히겠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진상이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평화·문화월드컵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세계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를 보여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행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최도시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지역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일 공동개최의 의의를 살리고 21세기 진정한 동반자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 양국간 월드컵 관련 문화행사의 교환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경기의 북한 분산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FIFA 등을 통해서 북한에 공동개최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 FIFA는 남북이 합의하면 일부 경기의 분산개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한 바 없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정부는 체육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의 정례화와 청와대에 관광비서관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정부는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11월 중에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관련단체·업계 등이 참석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초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별도의 문화관광비서관을 신설한 것입니다. 관광진흥확대회의의 정례화는 앞으로 필요성에 비추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관광대국을 위한 정부의 비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역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들과 함께 21세기 희망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새 천년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새로운 천년의 국가비전과 이념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이 미래의 희망을 나누도록 기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 국민의 새 천년 비전을 담은 시민제안 2000, 민과 관, 현재와 미래의 한민족이 함께 만들어 가는 평화의 열두 대문, 분야별 원로들의 20세기 메시지 등 밀레니엄사업은 국민적 성원과 참여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에 대한 총리의 비전과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국가운영 철학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 지식화가 보편화되고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 역량이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세계사의

일대 전환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새로운 세기에 우리나라는 통일된 한민족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권에서의 주도세력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 사회질서를 정착시키고 지식기반사회를 앞당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복지사회를 정착시키고 한민족이 한마음으로 세계를 향해 웅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층 간·지역 간 갈등을 뛰어넘어서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다 함께 힘차게 뛰고 정부는 이것을 최대한 보장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남아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경필 의원님의 질문에……

○부의장 신상우 총리, 잠깐 멈추어 주십시오.

남경필 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를 뜨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에 답변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쭙면서 상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총리 답변 시에는 약 70명의 의원들이 구성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40명이 채 안 됩니다. 언제나 저녁 늦게까지 항상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마는 언제나 있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이런 국회가 되어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3당 교섭단체 대표들도 계시는데 회의 정족수가 안 되어도 답변을 계속할까요, 국회법대로 해야 하겠습니까?

(「서면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들어야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이런 기회에 여당의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회가 질문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정부를 견제한다는 그런 기능 면에서 중요시되는데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이 되면 정부의 답변은 기회가 없을 정도로 되어 버리는 모순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회 자체 문제인 것으로 생

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 나름대로의 국회법을 준수하는 또 여타 앞으로도 철저히 국회법을 지켜 나가자고 하는 간담회에서 확약한 바도 있고 또 이런 모습으로서는 회의가 계속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각 부 장관에게 여쭙어 봅니다.

각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하는 장관 있음)

그 답변을 서면으로……

(○김홍신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게 해주세요.)

(「답변을 끝까지 들읍시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하신 분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합니다마는 이 회의 구성체가 우리 3교섭단체가 있습니다. 무소속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어느 소속 단체든지 간에 회의구성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법을 고쳐서 질문자가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회의가 구성이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의장단이 무리하게 한다면 나중에 그런 전례가 항상 되었을 때 나쁜 사례로 적용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김홍신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계속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는 것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충으로 사회자가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조한천 의원의 답변을 총리께서 마쳐 주시고 다음 법무부장관이 답변할 때까지 성원이 안 되면 산회를 선포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김문수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 계신 분들 답변만 먼저 하시고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생략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김문수 의원 말씀도 대단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 구성원이 안 되어서 성원 미달인데 어떻게 회의를 유지하라는 것입니까?

(「법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홍신 의원 의석에서 — 과거에도 이렇게 인원이 적어도 답변을 끝까지 들었습

니다. 제가 4년째 계속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데요, 그런데 왜 이번에 와서 이런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본인이 사회를 하는 동안 성원이 되지 않을 때는 기다리거나 성원이 꼭 되어서 저는 반드시 의사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질문자가 전부 궁금해하고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는 각 교섭단체마다 어디든지 이렇게 대정부질문에 무성의를 보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를 자꾸 쌓아 간다는 것은…… 고쳐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절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밖에 대기하시는 분,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조한천 의원의 답변을 마치실 때까지 성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성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중의에 따라서 성원이 안 되면 산회하겠다는 것을 사회자가 말씀드립니다.

조한천 의원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세요.

○국무총리 김중필 조한천 의원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공기업이나 산업별로 시범 실시하되 성과를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로시간단축문제는 현재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의제로 선정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이나 산업별 시범실시방안을 포함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탈북자 실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는데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취업문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국내 경제사정으로 전반적인 취업난 상태에 있고 이들이 대부분 전문기술과 기능이 부족해서 기업체들이 채용을 기피하는 데 반해 이들은 생산직보다는 또 사무직을 선호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해서 직업훈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고 북한이탈주

민 고용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취업보호를 실시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별 노동현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업종별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주셨는데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사정 간의 대화채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께서도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장년층의 경험과 경륜을 젊은 층에게 전수하는 등 노·장·청년층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술과 조직문화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젊은 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못지않게 노·장년층의 경험을 살려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등을 통해서 노·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퇴직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지속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지난 92년 리오데자네이로회의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이념이 국제적으로 크게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지속발전위원회와 같은 국가체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개발과 보전의 통합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지속발전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인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계, 전문가 그리고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성 평가를 의무화해서 타당성 조사 절차를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수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SOC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에 경제성과 사업성을 검토함과 아울러서 사업 착수 전에 공청회 혹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백두대간의 환경 문화자원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으셨는데 백두대간은 야생 동식물의 주요서식지로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현재 전국 자연환경기초조사를 2003년까지 할 예정입니다마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서 백두대간에 대한 세부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북 간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부는 남북 간의 환경협력이 필요하다는 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표목지원사업과 솔잎혹파리방제사업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 등을 적극 허용해 오고 있으며 지난번 산림복구 등 환경보전노력을 위한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백두대간 생태계 남북공동조사, 남북환경협력회의 회 구성 등 남북 당국 간의 환경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측은 기본적으로 당국 간 접촉과 협력을 기피하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차원의 환경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민간 차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때 이를 토대로 해서 점차 남북 당국 간의 협력 차원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예의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상우 좀 숙의를 해야겠습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는데…… 지금 아직 발언 드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정족수 문제로 회의체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선 총리 답변에 누락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일단 좀 더 성원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김홍신 의원 보충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무슨 보충질문이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총리가 성원이 됐을 때 답변에 대한 연장으로 후속하는 답변, 성원이 안 돼도 총리 답변은 지금 들으시지 않았어요?

(○김인곤 의원 의석에서 — 법대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니요? 가만히 계세요.

(○김인곤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서 한 사람 데리고 말이야. 좀 똑똑히 해요. 객관적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당 측의 인원이……

(○국창근 의원 의석에서 — 여당 야당 하지 말고 정족수가 부족하면 정회하고 기다렸다가 속개하든지 해야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만 말씀을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국창근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끝나고 보충질문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의사진행을 왜 그렇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서둘러 그렇습니다.

○김홍신 의원 보충질문 앞서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야간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면 본회의장에서 10여 명이 앉아서 행정부 답변을 국민을 대신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4년간 대정부질문 끝까지 지켜봤는데 늘 종료시간 무렵쯤에 의원님들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 관례상 한 번도 중간에 답변을 안 듣고 종료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이 듣고 또 속기록에 기록되고 그래서 의결할 때는 정족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는 행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어떤 경우라도 행정부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추궁·감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잘 아시고 지켜 오신 우리 의장님께서 지루하고 생리적인 문제가 있으시고 답변이 이렇더라도, 고생을 하시더라도, 또 여야 의원님들은 지금 오늘 일찍 돌아가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 누구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권위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대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일부러 그러셨는지 차홍봉 보건복지부장관 사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차 장관은 통합과다운 소신과 성실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러나 첫째, 청와대 정부여당의 압력이 있더라도 2000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국감장에서 자청했는데 며칠 만에 연기를 건의했다고 얘기를 했고 둘째, 그러나 실제 내막은 총선전략 때문에 내년 7월 1일로 총선기간을 살짝 넘기는 묘한 연기 배경에는 청와대 김유배 수석이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렇게 평소의 소신을 꺾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휘둘리는 장관은 이미 장관이 아닙니다. 넷째, 그래서 차 장관이 출석했음에도 장관 취급을 할 수 없기에 일부러 질문을 장관에게 하지 않고 총리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사퇴를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전임 복지부 장관의 무능한 태도를 감싸다가 국민연금 대란이 일어나서 공동정권에 부담을 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섯째, 총선이 끝나고 내년 7월 1일이 되면 거의 틀림없이 의료보험대란, 국민연금과동 등이 예견됩니다. 이때는 총리께서 장관을 잘못 지휘한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훌륭한 학자를 잡아 두지 마십시오. 학계로 돌아가서 소신껏 지성인답게 살게 해 주시는 것이 정부, 공동정권, 또 총리, 더군다나 국민과 그 장관 본인을 위해서도 옳은 길입니다. 사퇴하도록 결심을 하시고 대통령께 건의해 주실 것, 이 부분을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상우 답변 계속이니까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종필 보건복지부장관 사퇴권유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연금제도, 누가 해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또 누구든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소신껏 하고 있는데 하도 문제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엉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도중에서 좀 흔들렸었는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를 드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릴 테니까 용서를 하시고 계속 일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장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상우 여러분들이 회의 속개 요구도 있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생리적 현상을 감당 못 하더라도 밤샘해서 앉아 있을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회법에도 73조3항에, 과거 전례는 저도 야간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가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일단의 소신으로서 이렇게 항상 회의 성원을 촉구하고 법을 지키자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성의를 봐서 10분 뒤에 성원을 기다려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3분 회의중지)

○부의장 신상우 사회자가 부덕한 탓으로, 저는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마침 3당 교섭단체 대표들도 계시길래 인근 의원회관으로 연락해서 10여명쯤 긴급동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인원이 줄어 가고 있는 것 정말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안타깝기는 제가 미미해서 그런지 차라리 정회를 안 했으면 좀 더 여러분들과 절충을 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속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대단히 격에 안 맞는 것입니다마는 이대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정회한 것을 불찰로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미진한 것은 총리가 다음 월요일, 화요일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각 교섭단체별로 미진한 질문은 보충해 주시도록 하시고 오늘 답변을 못 하신 국무위원들은 질문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오늘 내로 속기록에 게재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동으로 유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06분 유회)

【서면답변서】

○국무총리 김종필
(남경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청와대나 총리실은 합당이나 신당 등 총선 논의를 중단하고, 이를 정치개혁특위에 맡길 용의가 없는지와 청와대 비서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출마할 사람들의 사직을 대통령께 건의드릴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음.

대통령과 저는 국민회의 총재와 자민련 명예총재로서 정국운영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지만, 합당이나 신당 문제는 당이 중심이 되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누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만,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 공무원이 총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직할 것으로 알고 있음.

국정홍보처가 정권의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국정홍보처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음.

국정홍보처는 과거의 홍보조정실이나 종합홍보실 같은 언론담당 조직이나 언론통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매체행정기능을 갖고 있지 않음.

현재 국정홍보처는 대언론·대국민 국정정보제공의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수렴해서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의 강구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남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로서도 시민단체(NGO)는 그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시민단체들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고, 그 지원방식도 과거와는 달리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아울러, 정부는 시민단체를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시민단체와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정보통신부의 감청 관련 집행협조대상 제출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의 답변이 다르다고 하시며 진상을 물으셨음.

알아본 결과, 법무부와 정보통신부는 실무진 간에 서로 협의하고 법률자문을 하여 주고 있으며, 정통부장관은 이 사실을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고받았음.

○법무부장관 김정길

(박세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박세직 의원님께서서는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위하여 미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고엽제 휴유증이나 후유의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현재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정부가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법무부는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모든 법적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에는 고엽제 피해자 1만 7000여 명이 지난 9월 30일 다우케미칼 등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제소한 총 5조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하여 3400억 원의 국가손해배상소송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는 국가 간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분쟁당사국 간에 국제사법재판

소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수락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을 수락한 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1985년에 과거에 수락했던 관할 수락선언을 철회하여 현재 양국은 모두 다 관할 수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하여는 양국 간에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 간의 소송은 그 성격상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교통상부에서는 미국 측에 고엽제 피해 보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제의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국내지원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김홍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 김홍신 의원님께서서는 이근안 전 경감을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도피한 이근안 전 경감을 검거하기 위하여 89. 1경 대검 중수부에 특별추적팀을 편성하고, 93. 3경부터는 서울지검 강력부에도 전담검사의 지휘하에 소속 수사관 10명으로 ‘이근안 추적 전담반’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근안의 자수 직전까지 그 가족 주변이나 연고선 등에 대하여 계속 추적수사를 하여 왔습니다.

또 그동안 수습 회에 걸쳐 시민제보가 있을 때마다 그 즉시 확인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 20경에는 이근안이 중국 북경에서 목격되었다는 첩보가 있어서 중국 공안당국과의 수사 협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근안이 어젯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수하였던 것입니다.

(김홍신·남경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김홍신 의원님께서서는 정형근 의원 문건폭로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찬 국회의 부총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남경필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과 함께 특별검사제 도입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문건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10. 27 이강래 전 정무수석이 정형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또 10. 28에는 중앙일보사가 국회의 이영일 대변인과 김현미 부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위 사건들은 현재 서울지검 형사3부에 배당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여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에 관하여는 총리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재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이재선 의원님께서서는 이근안의 자수동기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만 이근안은 검찰에 자수하였으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안의 구체적인 자수동기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로 나타난 자수동기는 대강 이러합니다.

먼저, 이근안은 99. 10. 21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부하경찰관 6명이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하여 죄책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근안은 최근 가족회의를 열어 몇몇하게 재판을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실제와 다른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해 당뇨병과 허리디스크가 악화되고 장기간의 은거생활로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겹쳐 자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수하게 된 것은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사건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이 계류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연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최연희 의원님께서서는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검찰의 중립과 독립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고 하시면서 내년 총선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금전선거’, ‘흑색선전’, ‘관권개입’ 등을 포함한 각종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단속,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명선거풍토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 13 실시되는 제16대 총선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검찰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야말로 21세기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의 척도가 된다는 인식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지난 10. 16일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서는 이미 지난 10. 13 전국 검찰에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사범들을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또, 각급 검찰청은 기히 편성된 선거사범단속 전담반을 확대 편성하여 기부행위 등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 1 대검찰청 주관하에 전국公安부장 검사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의를 계기로 효율적인 선거사범과 철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연희 의원님께서서는 계좌추적 남발과 야당 인사에 대한 편파적 검찰권 행사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9. 8 계좌추적에 대한 수사권 남용의 논란이 있어서 ‘계좌추적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특별지시를 검찰총장에게 시달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①금융거래의 추적은 가급적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수집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②추적대상 금융거래기간과 영장유효기간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 ③추적대상은 혐의자와 그

관련인물로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④추적대상계좌는 원칙적으로 추적대상자 명의의 계좌 및 직전·직후의 계좌에 한정하고, 추가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좌추적을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언제나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엄정, 중립적 입장에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연희 의원님께서서는 수해복구비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검찰권의 발동이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8월 초 국회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때 수해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는 곤란하나, 신중히 검토한 후 검찰에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내사하도록 지시하여 수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저의 국회에서의 답변은 대검에 전달되어 답변의 취지대로 검찰권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지청은 지난 8. 14 횡성군 섬강변 제방축조 공사의 감독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국토관리청 공무원 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또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9. 22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한 후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회사 간부 2명을 입건하여 1명을 구속기소하였고, 이 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잡고, 양평군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청은 지난 9. 28 ‘경기북부 수해의 원인분석과 방지대책’이라는 자체 분석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지검은 지난 10. 17 하수도 공사 감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종로구청 공무원 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가 어느 정도 끝난 시점을 택하여 지난 10. 27 검찰총장에게 ‘수해발생이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부정부패 또는 건설업자의 비리 등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함으로써 같은 지역에 연례적인 수해피해가 반복되는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 '수해원인 제공자에 대한 수사지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재

(김인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재해·재난관리제도의 개선대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련부서 축소와 법적의무 사항인 재해대책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미적립 문제에 대한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2~3년간 엘리뇨 등 기상이변으로 한반도 주변에 대규모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경우도 호우·태풍 등 6차례에 걸쳐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1조 2000억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대통령 직속의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한 도시홍수방지대책, 유역별 치수 종합대책 등 근원적인 수해 예방을 위한 '수해방지 종합개선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련부서 보강문제는 현재 마련 중인 '수해방지 종합개선대책'에 포함시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방재조직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은, IMF 영향 등에 의한 세수 감소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법정적립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재해예방사업비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폐업소의 난립과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청소년범죄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를 저해하고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학교주변의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 9월 말 현재 학교 주변의 불건전한 유해환경업소 총 5만 1300건을 단속하여 이 중 상습위반 업주 975명을 구속하였고

3만 451개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7. 1부터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업소관련 미성년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9. 1부터 9. 30까지 한 달 동안 학교 주변 등 유해업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 3560명 검거(80명 구속, 3404명 불구속, 경미사범 76명 즉심 회부)

미성년자 고용 등 퇴폐행위에 대하여는 업주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1차 위반 시 허가취소, 영업장 폐쇄조치 등으로 재영업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화·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행사 등에 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接客업소의 친절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 당시 보여 주었던 '친절한 한국'의 이미지를 되살리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친절 등 국민의식운동은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를 주축으로 친절·질서·청결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과 협력,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총선에 출마하려는 의도로 선심행정을 하고 있는데 사전선거운동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와 일부 직능단체가 총선과 관련하여 움직임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알고 있는지,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16대 총선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정치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내년 총선을 어느 때보다도 공명하고 깨끗이 치뤄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특별교부금의 집행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격차를 완화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국가 이전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13.27%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10/11은 보통교부세로서 자치단체의 기본행정 수준 유지를 위한 일반재원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1/11은 특별교부세로서 각종 재해복구 등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는 시책사업, 재정보전, 재해대책, 지역개발, 특정현안수요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자치단체별, 사업별 배정내역을 책자화하여 공개함으로써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내역도 내년에 정리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안에 대하여 감청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히고 안 했다면 그 이유와 이근안을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근안의 그동안 도피행적이나 검거지연 사유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곧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근안 가족 등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 감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은 정부에서 먼저 선수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도 취업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법정무비율인 2%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91년) 국가기관의 장애인 비율(0.52%)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간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정비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직 9급 채용의 경우에만 적용해 왔던 장애인 모집을 '96년부터 7급까지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전산직과 세무직 등의 직렬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비율이 '91년도 0.52%에서 '99. 6월 말 1.32%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행정기관에서 장애인 채용을 선수범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특히, 장애인고용비율이 낮은 부처에 대해서는 장애인 합격자를 우선 배정하는 등 장애인 채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은 기획예산처, 통일부, 비상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에 장애인 특별 배정하였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현실에 맞는 예우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합리적인 예우수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의원의 정책개발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상의 폭은 '98. 7 지방의원 정수 감축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지방의원들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16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권 지구당 위원장들이 버스를 동원한 단풍놀이를 하고 있다는데 그 실상을 점검하고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16대 총선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정치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내년 총선을 어느 때보다도 공명하고 깨끗이 치뤄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지난 16일부터 전국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수사전단팀'을 구성하여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10월 20일자 내일신문의 '여권이 작성한 김 모 의원 부인의 보험금 유치 과문 대책' 보고서에 적시된 경찰의 시어머니로 불리는 김 모 의원은 누구를 지칭하며, 동 문건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영남 출신 정보국 간부를 인사조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10월 20일자 내일신문에 보도된 '김 모 의원 부인의 보험금 유치 과문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경찰과는 전혀 무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1일 경찰청 정보3과 3계장으로 근무하던 오 경정을 서울지방경찰청(공안경찰대)으로 전보시킨 바 있는데 그 사유는 오 경정이 일반전화 FAX 설치 시는 보안대책 수립 후 통신담당 부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보안업무 규정 및 일반전화망 FAX 보안관리지침'을 위배하여 본인의 집무실에 사실 FAX를 설치하고, 외부에 문건을 송신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장관 김덕중

(김인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룩하지 못했거나, 정책적 모순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최근, 교육개혁으로 학교현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교육계에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부정적 견해와 새로운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견해가 있음.

현재 야기되고 있는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모순을 제거하여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대학에 박사과정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일반대학과 불합리한 차별을 없앨 용의는?

우리 부는 산업대학에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를 할 계획임.

시행령 개정이 순조롭게 된다면 금년 이내에 박사과정을 포함한 전문대학원 신설 근거가 마련될 예정임.

산업대학이 대학별 건학이념에 따라 더욱 특성화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장기적으로는 산업대학 체제에 대한 전문가 정책연구를 의뢰해 놓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산업대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인곤·김정숙·조한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김인곤·김정숙·조한천 의원님께서서는 교원 사기진작 및 교원 수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곤 의원)
교원들의 사기문제와 관련하여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획기적인 교원 사기양양 대책과 교원 수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람.
(김정숙 의원)
내년도 교원 1만 1000명 명퇴에 따른 '교육부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교원 사기진작 방안
(조한천 의원)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교원 사기진작 대책의 성과와 개선점

1.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고 있다는 데 대하여는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있어 교원이 소외되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정부는 교원정책을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교사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으며, '교육 정책 공모제' 및 '교과교육 연구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고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 교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1일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권익 및 후생복지 향상 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추진 중임.

그 주요내용은 교육활동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원예우, 교권 확립방안 강구, 행정업무 및 잡무 경감, 후생·복지증진 등 4개 영역 13개 과제임.

동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계부처의 협의 등 추진상 다소의 어려움이 없지는 않으나,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담임수당의 경우 현재 3만 원에서 내년에는 6만 원, 2002년까지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교원의 처우를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원의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원들이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업무보조를 위해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대하여는 금년도 초등교원 수급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인원의 급증 등으로 1만 5900명의 퇴직교원이 발생하였으나 교육대학 졸업생, 중등교사 자격자 보수교육자, 퇴직교원 초빙 기간제 채용 등으로 필요한 교원을 충원함으로써 교사의 부족으로 학생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음.

다만, 중등교사 자격자의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임용 후 직무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교육력을 높이겠으며 퇴직교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교육적 지도력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임명토록 함으로써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000학년도는 초등 퇴직교원의 대폭감소가 예상되며, 충원자원은 '99학년도 교육대학 졸업생, 기 선발한 중등자격자 보수교육자, 퇴직교

원 초빙 기간제 교사 활용으로 교사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교사 부족으로 인한 학생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김정숙·이재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김정숙 의원)

지방교육재정 법정교부율을 11.8%에서 15%로 인상하고, 폐지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이재선 의원)

교육재정 확보방안과 교원 처우개선 방안은 무엇이며 내년도 수업료 인상계획을 취소할 의향이 없는지?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조세체계 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정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함.

우리 부에서는 교육재정은 최소한 GNP 대비 5% 수준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일부 한시적인 교육세와 일반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전입시키는 시·도세의 2.6%를 영구세로 전환하고(2.2조 및 3천억 원) 학교용지 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아파트 및 택지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며 만약 교육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현행 교육세를 각각의 본세에 흡수·통합하되 국세분 교육세는 의무교원봉급교부금을 보수개념의 교부금으로 확대하고(3.1조 원), 불가 시 내국세 11.8% 교부율을 17.5%로 상향조정 추진(2.9조 원)하며 지방세분 교육세(2.6조 원)는 지방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해당액만큼을 직접 전출토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되, 불가 시 지방교육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교원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이러한 제약이 있기는 하나 정부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는 일반공무원의 평균보수인상률 9.7% 외에 학급담임수당을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10.5% 인상이 예상됨.

2000년도까지는 정부재정 사정으로 보다 많이

교원처우를 개선하지 못하였으나 정부재정 사정이 나아지는 2001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교원처우 개선에 힘쓰겠음.

내년도 수업료 인상 취소에 대하여는 2000년도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1조 1296억 원이 증가 예상되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세출이 1조 5128억 원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3832억 원이 부족하여 시설비, 학교운영비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인건비 인상, 교원명퇴 증가, 학교신설 등의 재정수요를 메우기 위해 시도가 기재한 금액은 3조 57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은 약 420만 명이나 이중 약 300만 명은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37만명), 공무원자녀 등 학비보조수당 수혜자(235만명), 생활보호대상자(19만 명), 실직자 자녀(9만명) 등으로 수업료 인상의 부담을 안게 되는 학생은 약 120만 명임.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 40만 명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 학부모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박세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김정숙 의원님과 박세직 의원님께서 교실붕괴에 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교실붕괴 대책
(박세직 의원)
교실붕괴 현상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최근 교실붕괴 현상은 우리 교육이 당면한 매우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

교실붕괴 현상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우선 현 교육이 대입 수능시험 준비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의 수업태도,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한편, 학교 교육보다 학교 밖의 과외공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등으로 교실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봄.

앞으로 2002년 새 대입전형에서는 학생의 수업태도, 생활상태 등 학교 내 모든 교육활동 내용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전형자료로 그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학생의 학교생활을 올바르게

게 정립케 할 것임.

또한 향후 5년간 교육여건 개선, 교원 증원, 담임수당 연차적 인상,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시책을 펴 교원의 사기진작과 권위회복에도 주력하겠음.

(김정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새 대학입시제도는 근원적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02년도 시행을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대학의 학생선발 및 졸업 등 대학 전 과정을 대학 완전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는 그동안 우리 교육의 큰 병폐로 지적되어 온 입시 위주의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입학 제도상의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새 제도는 종래의 시험점수 위주의 전형방법에서 탈피하여 학생이 가진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전형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큰 특징이 있음.

따라서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수행평가와 절대평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 시행준비단’을 중심으로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새 대입제도가 조속히 학교현장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생선발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문제는 이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 시에도 밝히 바와 같이 앞으로 정부는 학생선발과정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며 또한 대학의 교육과정을 비롯한 주요 학사운영은 현재에도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뇌한국21’ 사업은 대학과 학문분야를 서열화시키고 교수들의 반대를 불러왔고, 또한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음에 따라 원천적으로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분야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이 '98년 현재 세계 22위(IMD보고서), 이공계 학문연구수준(SCI수준)이 세계 17위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지식·기술창출 구조가 취약함.

이러한 현실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

가경쟁력이 요구되는 첨단분야 중심으로 대학원 단계에서 학문후속 세대양성을 목적으로 두뇌한국21 사업을 착수하였음.

또한 사업단을 선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에 정부대표로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음.

선정결과에 대해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미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많은 대학 및 교수에 대한 신뢰보호와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청문회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모든 정책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확한 집행결과예측을 통하여 완벽하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봄.

그러나 정책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각종 감사 및 평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현재도 사후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교육청문회보다는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재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인문과학의 르네상스를 우리 민족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전 및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선 그 첫 단계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인문과학의 중흥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고, 다가오는 세기에 우리 민족을 미래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올려놓을 정신적 원동력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함.

우리 부에서는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을 기르기 위해, 자연과학 못지않게 인문과학 교육과 인성교육의 충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임.

학교의 컴퓨터 사용 증가 등에 따라 학교 공공요금 중 40% 이상이 전기요금인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용의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열악한 학교운영비로는 늘어나는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임.

우리 부에서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수준

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나 전력수급 투자재원 확보 및 타 수용가와의 형평성 유지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용 전기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고등학교도 학교부지를 매입 시 초등학교와 같이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용의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와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건설교통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특수교육 5개년계획의 내용과 실천방안

2003년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이 언제, 어디서나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함과 아울러 및 통합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담당교사 연수 강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시설 여건을 개선할 것이며 장애인 평생 교육복지 지원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충 등으로 소외되기 쉬운 특수교육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26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조한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교육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인 개선점에 대하여?

현재, 교육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교원단체의 각종 교섭·제안제도,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시행·실시하고 있음.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의견반영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교육정책을 입안, 형성,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멀리 통학해야 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음. 지역별 학교시설 현황과 개선대책은?

전국 51명 이상 과밀학급은 '99. 4. 1 현재 1만 4562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7%이며,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학급 수는 45개교 253학급임.

임시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교실은 전국적으로 386실로서 이 중 253실(서울 16개교 158학급, 경기도 9개교 47학급, 인천 7개교 48학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임시교실은 주로 기존 노후교실 개축에 따른 임시수용 목적으로 사용되나 일부 지역은 아예 교실을 지을 공간이 없어 상시 사용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학생 재배치 또는 학교전환 배치 등 방안을 강구 중임.

2000년도에는 국가지원 학교시설 교부금 5000억 원(재특용자 3000억 원 포함) 지원과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 5094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로 153개교의 학교신설이 추진될 예정임.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용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아파트 및 택지분양자들이 일정액의 분담금을 내도록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박세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청소년의 흡연, 약물복용 등 탈선행위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 건전 여가시설의 부족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의 탈선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심성순화를 위해 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수련시설 등 건전한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각종 문화·예술분야 수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제청소년에 대한 상담활동의 강화 및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의 확대 실시 등 다양한 선도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의 시발이 되는 가출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및 관련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운

동을 추진하고,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선도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도 적극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성장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친절도와 자긍심 제고 대책은?

2000년 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축구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2천년시대에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관광업계는 그동안 정직·친절·청결운동으로 서비스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관광부는 관광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행업·호텔·관광식당 종사자, 국외여행인솔자, 외국인 안내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기초 외국어 회화, 친절·예절 등 서비스 소양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99년 5430명→2000년 1만 명)

또한 웰컴투코리아시민협의회 등 민간 시민단체와 함께 손님맞이 친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안내표지판의 한자 사용 및 영문식 로마자 표기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표지판의 한자병기에 대해 우리 부는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도로표지판의 한자병기를 건설교통부와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98년 제주도에 이어 '99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고속국도의 통도사, 해인사, 백양사, 금산사 등 4개 인터체인지 출입구에 각 4개씩 32개와 일반국도의 경주, 남원, 부여, 공주 등 4곳에 100개의 한자병기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일반도로표지에도 한자병기가 가능하도록 '도로표지규칙' 개정을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독립기념관·박물관·중요 문화유적지에 대하여 우리말과 영어 이외에 일본어나

중국어로 된 설명서나 표지판을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국립민속박물관은 추진 완료)

다만 독립기념관의 일본어 표기 문제는 그 성격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행 로마자 표기법 중 반달표(ˆ), 어깨점(˙) 등 특수부호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로마자 표기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 위주의 로마자표기 방식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안으로, 이 표기법의 특징은 모음표기에 있어 국어의 모음 한 글자에 로마자 두 글자 이상으로 대응하는 영어철자를 모의발음기호로 하는 표기방식입니다.

이러한 표기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며 하나의 모음은 하나의 글자로 적는다는 보편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과 정보화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 주관으로 로마자 표기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공청회,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국어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관광호텔업계의 애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지역의 특급호텔을 제외한 많은 호텔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영난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호텔비품에 대한 특소세인하 및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인 호텔과밀부담금 면제와 풍치지구에 자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호텔시설의 신축 또는 증개축 허용 등 호텔업계에서 건의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오는 11. 8일 개최하여 업계

의 애로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 관광진흥확대회의는 매년 정례화함으로써 관광진흥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방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개발을 포함한 지역특성에 맞는 특출한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외래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7대 문화관광권 진흥계획'을 수립, 전국을 7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특화된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과 '경북 북부지역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 각 지방의 역사·문화·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개발을 위해 제2차 문화권유적정비 5개년계획('98-2002)을 지속 추진하고, 김해 가야지역 등의 문화권내 주요 유적의 보수정비 사업을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월드컵경기장을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천재지변, 인재사고, 재원부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평가반'을 구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면밀히 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IMF사태 등으로 일부 경기장의 건설업체가 부도난 사례가 있었으나, 원만히 해결되어 경기장을 정상적으로 건설 중에 있으며, 자체 재원으로 경기장을 건설하는 일부 개최도시의 재원 부족에 대비하여 공공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대회준비가 본격화되는 2000년도에 대회 준비 운영을 현장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정부 관련부처·대회조직위 합동으로 대회 준비지원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상시로 개최도시를 순회하여 준비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한편, 경기장의 완벽한 건설 등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석홍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전 의원님께서서는 2000년도 문화예산 1%에 관광산업으로 분류된 예산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시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순수문화 발전을 위한 투자에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순수문화 발전을 위한 투자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부에서도 순수문화예술 진흥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초 바탕임을 인식하고, 문화예술원 진흥을 통하여 문화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의 정책방향이 문화산업 중심으로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국내외 문화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문화창조력의 핵심이 되는 순수예술은 그 자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문화정책 수립 시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순수문화예술분야(문예진흥)에 대해서는 2000년도 문화예산 총 9315억 원 중 43.3%인 4032억 원을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문화산업 19.1%, 1782억 원)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산 1%에 관광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은 관광과 문화와의 연관성이 깊어지는 추세에 따라 우리의 훌륭한 민족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풍광을 최대한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천 도자기축제, 진도 영등제 등 지역의 문화축제 사업도 관광부문에 포함하여 국민에게는 의미 있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가능케 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조문화재의 해충피해에 대한 보존대책

우리나라 목조문화재는 총 2103건('99. 8월 현재)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324건(국보 20, 보물 116, 사적 48, 증민 140), 시도지정문화재 1779건

우리 부에서는 흰개미 등 해충에 의한 목조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하여 방충방연제·훈증가스

방제를 '80년 이후 연차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방연제 도포 : 금산사 미륵전 등 1365동('99년 40개동 130동)

훈증가스 : 나주향교 대성전 등 26동('99년 6동)
'99. 5월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방역관계 전문가가 공동으로 '강릉객사문' 등 51건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충해방제 예산 증액확보 추진과 아울러 흰개미 발생 및 생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시 피해부분 목재 경화처리 및 건조목재 사용 등 목조문화재 보존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존·보호 대책과 지방의 전문인력 확보 방안

우리 부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99. 7. 1 시행),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문화재와 관련한 사전협의와 문화재 재표조사 의무화 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으며 [사전협의를 15만㎡(약 4만 5천 평) 이상의 공사를 대상, 지표조사는 3만㎡(약 9천 평) 이상 공사 계획 시], 문화재 발견 시 공기지연 및 추가비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멸실방지를 위하여 전국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도별 발굴전문기구 설립·육성, 중앙매장문화재센터 건립 추진 등 다각적인 매장문화재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문화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원이 지방문화의 센터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지방문화원을 지역 전통문화를 진흥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는 향토문화 활동의 중심센터로서 육성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특성 있는 지역문화를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문화축제, 문화예술행사와 강좌, 예술 창작물 발표, 향토사료 조사수집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게 하여 지방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이외에도 지방문화원이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복지센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개선하고 향토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향토사료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정보 및 자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이재선 의원님께서는 스크린쿼터제 유지를 위한 대책 및 정부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같음하고자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행정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창작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제약했던 공연법·영화진흥법 등 12개 법령을 개정하여 180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문예진흥기금을 정부의 통제 성격이 강한 공공기금이 아닌 기타 기금으로 존치하였고 문화예술계의 숙원이었던 문예진흥원장의 상임화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문화의 날 행사를 정부 주도가 아닌 예총·민예총 등 민간 주도로 거행하는 등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올해 IMF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고특별지원 사업도 정부 주도가 아닌 문예진흥원에서 자율적으로 심의·지원토록 하였으며, 민간의 문화예술진흥활동에 지원되는 문예진흥기금도 정부가 관여함이 없이 자율성을 가진 기금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집행

에 있어서도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는 등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등급제 및 등급 외 전용상영관 도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재 ‘영화진흥법’의 개정 작업을 통해 ‘등급분류보류제도’를 폐지하고 완전등급제를 실현하는 한편, ‘등급 외 전용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급 외 전용관’이 허용되더라도 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영화는 상영할 수 없으며, 허가기준 및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등급 외 영화의 광고·선전 등을 금지토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등급의 전용관 관리에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등급 외 영화 심사 시 법률전문가 및 사회단체 인사를 참여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방송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와 방송법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방송법 제정이 4~5년 동안 지연되면서 위성방송사업이 시작조차 못 하고 있고 케이블 TV가 본제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등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 방송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의 독립성 확보나 방송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치 등 우리 방송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새 방송법안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정부는 방송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이나 법안검토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아직도 여야를 비롯하여 여러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방송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하여 새 방송법 제정이 시급한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가 갖고 있는 21세기 체육발전의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정 100대 과제에 ‘국민생활체육진흥’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 부는 동네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공간의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동호인 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현재 적극적인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포츠·레저에 대한 수요도 점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레저시설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는 그간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해 온 엘리트체육의 지속적인 진흥은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한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아가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등에 대한 투자도 증대시켜 체육이 21세기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관광대국을 위한 정부의 비전은?

정부는 21세기 관광대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광 기본여건인 호텔, 컨벤션 등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살 거리 등을 한국특성에 맞도록 개발하여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적·문화적·자연적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개발·조성하여 특화시켜 나가는 한편, 문화와 관광을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가 증대에 따른 국민의 관광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 차원의 관광정책을 육성하는 한편,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높임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경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남경필 의원님께서 ①국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하시고, 신동아 11월 호에 따르면 제가 국회에서 위증과 허위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시면서 ②대통령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장관 스스로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③또한 해임건의안 표결 전 ‘내가 밋더라도 언론탄압 논쟁인 만큼 대통령 체면을 봐서라도 부결시켜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코 위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신동아 보도도 그러한 내용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사퇴문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충고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밋더라도 대통령 체면을 봐서라도 부결시켜 달라’ 등의 보도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모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보도한 내용으로서 저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김인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국가재해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비상의료지원단’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98년 4월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응급의료소 기능

-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응급처치,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적정한 이송관리
- 필요할 경우, 의료인이나 장비 등 동원
- 비상시에 대비하여 현장응급진료를 위한 이동응급 의료세트를 13개 시도별로 기 배치

또한 향후 2001년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비상진료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

씀드립니다.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2000년 7월 1일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간 의료보험통합을 위해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후속업무 추진에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시행시기를 2000년 7월로 조정·시행하게 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준비도 완벽하게 하고, 국민홍보도 보다 철저히 하여 내년 7월 1일에 차질 없이 의료보험통합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2002년 월드컵대회의 대비책으로 가정과 식당에서 ‘덜어 먹는 식사법’을 정착시켜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덜어 먹는 식사법’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위생적이고, 간소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좋은 식단’ 모형을 개발하여 전국 음식점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밥과 반찬을 각자가 먹을 만큼만 덜어 먹도록 유도하여 이제는 대부분 정착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 등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좋은 식단’ 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국제행사 및 월동에 대비한 노숙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늘어난 노숙자가 한때 6200여 명 수준에 달했으나, 10월 현재 5400여 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 쉼터에서 4000여 명의 노숙자를 보호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거리 노숙자의 동사 방지와 긴급보호를 위하여 노숙자가 많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 동절기 응급쉼터를 각 1개소씩 설치·운영 중에 있음. 거리 노숙자에 대하여는 상담을 실시하여 우선 응급쉼터로

안내하고, 숙식 및 의료지원 등 기본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쉼터에서 숙식 등 편의제공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노숙자에게는 (약물 및 알콜중독 치료, 분노조절, 직업교육, 금전관리 등 54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활·자립을 유도하고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자립과 사회 복귀가 어려운 노숙자는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의원님께서서는 의료보험의 재정적자가 1조 9000억 원이라고 하시고 이에 기초하여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98년도 재정적자액 1조 9000억 원은 적자액 8600억 원에 국고지원액 1조 759억 원을 합한 액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역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정수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고지원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최초 마련한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의 지출 억제, 관리운영비의 절감, 보험료 수익의 증대 등 각종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의 국민부담과 관련하여 의료보험 약가를 당장 인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현행 의료보험 약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고시가 상환제도’를 의료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금년에 보험약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30.7%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약가 인하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났으며 11월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대책과 관련하여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제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다만, 소액진료비를 전액 본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장기적인 검토과제입니다.

내년도 신규 연금수급권자의 손실 보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일제신고 결과 도시지역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하락함으로써 내년 신규 연금을 받게 되는 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연금액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구체적인 연금액은 올해 12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에 의거 결정될 예정이고 현재 보험료 상향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연금액 하락 정도는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99. 10. 27일 현재 보험료 상향조정 결과는 67만 명이 평균 35만 원을 상향조정하여 최초 신고액보다 6만 9000원 상승한 91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내년 신규 연금수급액은 금년도 상향조정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조정하되 수급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조정은 현행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법 제4조(급여액의 조정)③이 법에 의한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임금·물가, 기타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사정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①국민연금사업에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납부예외자가 절반 이상이 넘고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납부예외자는 장기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세청의 소득관련자료, 타 사회보험의 자료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소득활동이 확인되는 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 가입자의 징수율은 최초 60%에 비해 9월 말 현재 75% 수준으로 상승되었으며,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진납부 유도 및 자동이체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진납부 유도 및 자동이체를 권유하고, 장기·고액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개별방문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노인문제의 증대현상을 지적하시고 실버산업의 육성방안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문제에 관하여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실버산업 육성을 위하여 '95~'98까지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34개소, 1080억 원)하고, 시설 설치·운영 시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 설치 사업자의 자기자본 30% 확보 의무 규정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하여 실버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금융지원 등의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실버산업이 적극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사회-국가의 삼위일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취약노인은 시설보호, 생계지원 등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①노인 적합직종 개발, ②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③노인 취업알선 사업, ④ '실버창업'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김명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종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1) 경제적 생활 안정책으로, 2000년대 이후의 노인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대상이 아닌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확대 지급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적합직종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2)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지원하며 장기요양보호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며, 3)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등 여가시설을 확충

하고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통합시기의 조정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국민복지의 확대 차원임을 지적하시고,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수립 및 재정안정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통합의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업무 추진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며, 총선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년 7월 1일 의료보험통합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급여수준을 유지하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진료비 상승요인을 완화하고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지출을 억제시키는 한편, 징수율을 높이고 국고지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약분업의 홍보계획 및 시행준비상황, 의약분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의약분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약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체계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2000년 7월 시행되는 의약분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작업, 의료보험수가 및 약가제도의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지역별 협력위원회 구성 등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의사에게는 처방진료를, 약사에게는 조제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연간 6300억 원 정도의 보험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에 따른 약품사용량 감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약국의료보험 폐지 등에 따라

6800~7800억 원이 절감되어 전체적으로 국민의 부담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의약분업을 실시했을 때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에 지나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보험수가구조를 조정하고 금융지원 등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연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그동안 의료보험통합 반대여론을 흡수하기 위한 노력 및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간 의료보험통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범국민대책회의’는 그간 의료보험통합의 연기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수차례 직장의보노조 간부, 조합 대표이사 및 조합 사무국장들을 면담하고, 의료보험통합이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결정 및 통합법안의 국회 의결 등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인 만큼 동참하도록 설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료보험통합의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였습지만, 의료보험통합의 원칙과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처리되는 대로 그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생산적 복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제정, 관련예산 증액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핵심적 제도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1일 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 대상자의 선정 및 조

사방법, 자립 자활지원 방법 연구 등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관련예산은 내년에 총 1조 8503억 원으로 정부 일반예산의 2.13%를 책정하였으며 생계보호대상자를 현행 54만 명에서 내년에는 154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사업 예산 1조 9101억 원과 비교할 때 약간 줄어든 예산입니다만, 이는 IMF 경제위기 이후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며, 실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수준은 향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12월에 발표할 2000년도 최저생계비, 내년 5월~7월 사이에 실시할 보호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예상과 달리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명자

(박세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도시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의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오존경보 등 오염기준 초과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우리나라 대도시의 대기오염상태는 특히 오존발생 등에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대기오염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2002년까지 수도권과 월드컵축구대회 개최도시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5천대를 매연이 없으면서 오존생성물질도 60~70% 줄어들게 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하고, 2007년까지는 전국 도시지역의 시내버스 전량(약 2만 대)을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114억 원을 들여 저공해 핵심부품인 배기가스 재순환기술 등을 민간부문과 함께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늘려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오염저감기술이 보급되도록 촉진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존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오존오염 정도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오존오염 개선을 위하여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대책과 함께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과 연료품질의 기준을 강화하고, 운행차에 대한 검사방법 개선, 경유 가격의 점진적 인상을 통한 경유차 사용 억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월드컵 개최도시를 포함한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물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의 시행에 앞서 상·하류 간 갈등의 해소와 정부정책의 신뢰회복 내지 지역이기주의 극복이 급선무라고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낙동강 물문제는 단순히 물관리 대책 제시 차원에서 나아가 상·하류 간의 오래된 갈등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하류 간의 갈등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정부는 상·하류가 유역공동체로서 낙동강을 살리기에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 지역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풀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지난해 팔당대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끈기 있게 대화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 나간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엄청난 반발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냈던 것은 소중한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이보다 더 어렵겠지만 성심으로 노력해서 상·하류 간의 갈등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명실공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물문제는 기본적으로 상·하류 간에 여건차이

와 그로 인한 입장을 내포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로 규정하기보다는 어느 일방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동강 물 대책의 확정에서 환경규제 등의 부담이 수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진일보한 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과 식당에서 ‘덜어 먹는 식사법’을 정착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은 1일 1만 2천 톤으로 전체 생활 쓰레기 중 26%를 차지하고, 현재 29%가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것은 사료·퇴비 등 유기성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98. 9월에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공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률을 2002년도까지 50% 이상 제고시키도록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우리의 음식문화와 관계가 깊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덜어 먹는 식사법’을 비롯하여 잉여식품나눔은행(Food Bank)운동, 좋은 식단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주도로 전국 가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한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기본계획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사전 환경성 검토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사전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의 의사결정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지난해 공항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를 실시계획단계에서 기본계획단계로 앞당겨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개별법의 규정을 근거로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에 의해 기본계획단계부터 입지 등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처 간 사전협의제도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기초조사가 미흡했고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제한되는 까닭에 환경평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대형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사업계획의 초기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과 대형개발사업의 제안 시에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그때 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지역의 악취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악취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시화지역의 악취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97. 6월부터 이 지역에 대한 오염원 감시·단속 강화,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등 악취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이 많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97. 7월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서 타 지역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은 깨끗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시찰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만, 경인지역은 소규모 영세업체와 무허가 배출업체 등이 대규모 주택가와 혼재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의 개선조치를 말씀

드리면, 환경부는 '99. 10. 2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규모 도장시설, 소형 소각로 등을 규제대상으로 확대하고 처분을 강화했습니다.

무허가·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대집행(代執行) 등을 통해 무허가시설을 직접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령(환경범죄및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오염 배출업체의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악취발생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방지시설 설치를 조기에 추진하는 등 보다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경인지역 주민의 악취 피해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공사 설립방안에 대한 환경부장과의 견해와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운영관리와 지도·감독의 이원화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업무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데 따르는 혼선 등 매립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공사가 설립될 경우 현재의 문제점이 완화되어 수도권매립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99년 4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전 등 관계기관 직원들로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추진기획단'을 환경부에 설치해서 이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금년 12월부터 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발전적인 운영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용

(김명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실업예산 축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2000년도 실업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음.

먼저 실업추이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말 178

만 명, 실업률 8.6%를 정점으로 하여 지난 9월 말에는 실업자가 107만 명, 실업률 4.8%로 7개월 동안 월평균 10만 명씩 감소하였습니다.

연평균 실업자 수는 금년에 140만 명, 2000년은 금년보다 훨씬 줄어든 122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2000년 실업대책 예산은 5조 8천억 원 수준으로서 '99년의 9조 2400억 원보다 37.1%가 줄어들었으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예산은 4.5% 증가(13.4조 원→14조 원)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측면의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11.9% 증가(5조 원→5.6조 원)하였습니다.

2000년 실업대책 예산은 가장 수혜가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집행하고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경우 실업자 보호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실업통계에 실망실업자 등이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실업률 산정방식의 재조정 계획에 대해 물으셨음.

현행 실업률 통계의 조사 및 공표는 통계청 소관사항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안에 따라 실업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ILO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참가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망실업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음.

※실망실업자 통계를 발표하는 미국, 영국에서도 이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다만, 효율적인 고용정책대상 파악을 위하여 공식실업률 외에 노동력의 불안전활용지표를 통계청에서 연구·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이후 취업실적이 저조한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정책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소관부처 전환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음.

정부가 1990년 장애인고용의무제 도입 이래 장애인 취업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간 정부가 취업시킨 장애인은 '99. 9월 현재 총 3만 3300여 명에 달함.

※연도별 취업실적

취업장애인 : 1384 → 3247 → 6467 → 6379
 년도 '91 '95 '98 '99.6

앞으로도 사업주의 고용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고용정책업무의 소관부처 이관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용정책의 이원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함.

(조한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물으셨음.

일자리 200만 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했을 때의 결과와 민간부문의 노력이 어우러져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취업자 수의 증가를 의미함.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개혁, 유망분야의 인력양성을 통해 일자리 여건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의 지식화·고부가가치화 성장잠재력이 큰 정보통신, 전력 등 SOC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정부는 노사정 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함.

근로시간단축문제는 제3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지난 6. 25 노·정 합의되었으므로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임.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구현을 위해서는 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신노사문화사업은 노사정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함.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참여분위기가 덜 성숙된 관계로 우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정부가 우선 시대적 변화를 알리고 그릇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홍보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의 참여여건이 성숙되면 노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영정보 공유, 우리사주제도 발전 등의 경영참여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노사협력은 노사의 경영정보 공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신노사문화 창출의 일환으로 경영정보 공유를 적극 지도하고, 우리사주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노사관계제도도 지식정보시대에 맞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사관계도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생산현장에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을 증가시키고, 정부는 노사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신노사문화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실적과 노사정위원회의 실질적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은 총 90개 항목으로 이중 정부 측 이행사항 71개 중 59개를 완료(일부 완료 14개 포함)하였으며, 나머지 과제는 물가안정 등과 같이 완료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소관부처에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음.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5월 노사정위원회법을 제정하면서 공무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 합의사항 성실 이행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앞으로 노사정 참여주체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산업별 노동현안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업종별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레벨에서의 노사정 대화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때 노사정협의회 설치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 중에 있음.

업종별 협의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기업별로 근로조건에 차이가 큰 점등을 고려할 때 추진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산별체제의 개편은 노동계의 자율적인 문제이긴 하나 정부정책적인 차원에서 노사단체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현행법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및 교섭형태도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노동조합의 조직 및 교섭구조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제로 상정되어 있으므로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 도출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물으셨음.

전체 산업재해의 6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의 대부분이 대기업 협력업체이며 대기업은 주로 유해·위험작업을 중·소규모 사업장에 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노사양측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박세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실직 노숙자 대책에 대해 물으셨음.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전국 실직노숙자 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등과 민관 협조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의 지원, 공공근로사업 제공 등 노숙자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5800여 명의 노숙자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인바, 이들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우선 동절기에 실시하는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및 능력개발훈련에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자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노숙자를 유형별로 세분하여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숙자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해 사회복지를 촉진시키고, 직업능력과 의욕이 없는 노숙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계보호를 하고 있음.

(참 조)

제208회국회(정기회) 의사일정

1999.10.29~11.15

일자	부의안건	비고
10. 29(금) 14:00	1.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 휴회 결의	○ 10. 30 (1일간)
10. 30(토)	휴 회(1일간)	
10. 31(일)	공 휴 일	
11. 1(월) 10:00	1. 경제에 관한 질문	
11. 2(화) 10:00	1. 경제에 관한 질문 (계속) ※ 휴회 결의	○ 11. 3~11. 13 (11일간)
11. 3(수) ~ 11. 13(토)	휴 회(11일간)	○ 상임위 활동 - 예산안 예비 심사 (11. 3~11. 10 : 8일간) - 법률안 등 안전 심사 ○ 예결위 활동 - 결산·예비비 심사(11. 3~11. 10 : 8일간) - 예산안 심사 (11. 11~11. 13 : 3일간)
11. 14(일)	공 휴 일	
11. 15(월) 14:00	1. 안건 처리	

○출석 의원(233인)

강삼재 강재섭 강종희 강현욱

국창근 권기술 권영자 권오을
 권익현 권철현 권길승 권김경재
 김고성 김광수 김광원 김근태
 김기수 김기춘 김길환 김덕
 김도언 김동욱 김명규 김명섭
 김명윤 김무성 김문수 김범명
 김병태 김봉호 김상우 김상현
 김선길 김성곤 김수한 김영선
 김영일 김영준 김영진 김영진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운환
 김원길 김의재 김인곤 김일윤
 김일주 김정수 김정숙 김중배
 김종필 김종하 김종학 김중호
 김중위 김진배 김진재 김찬우
 김찬진 김철 김충일 김충조
 김철환 김태식 김태호 김허남
 김형오 김호일 김홍신 김홍일
 나오연 남경필 노기태 노승우
 류선호 류종수 류홍수 맹형규
 목요상 박광태 박구일 박근혜
 박명환 박상규 박상천 박세직
 박시균 박신원 박우병 박원홍
 박정수 박정훈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준규 박찬주 박철언
 박태준 방용석 배종무 백남치
 백승홍 변용전 서석재 서정화
 서정화 서청원 서한샘 서훈
 설훈 손세일 송업교 송현섭
 송훈석 신경식 신기남 신상우
 신영국 신영균 심정구 안동선
 안상수 안상수 안택수 어준선
 오세웅 오양순 오용운 오장섭
 원유철 유용태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희 이경재 이국현
 이규정 이규택 이궁규 이길재
 이동복 이미경 이부영 이사철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석현
 이성재 이성호 이수인 이신범
 이양희 이영일 이용삼 이우재
 이원범 이원복 이윤수 이응선
 이재명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무 이중재 이태섭 이택석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협 이형배 이희창 이훈평
 임복진 임인배 임진출 임채정

장성원 장을병 장재식 전석홍
 정균환 정동채 정문화 정상구
 정영훈 정우택 정의화 정일영
 정재문 정창화 정한용 정형근
 정희경 조성준 조순형 조영재
 조웅규 조익현 조진형 조찬형
 조한천 주진우 시대섭 차수명
 채영석 최선영 최연희 최희준
 추미애 하경근 하순봉 한광옥
 한승수 한영수 한영애 한화갑
 함석재 허남훈 허대범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황낙주 황우여

○청가 의원(21인)

장경식 장용식 강창희 권정달
 김동주 김복동 김영배 김인영
 노무현 류재건 박세환 박승국
 박희태 안재홍 이상희 정세균
 정호선 천정배 최재승 최형우
 함종한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종필
 법무부장관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재
 교육부장관 김덕중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정덕구
 보건복지부장관 차홍봉
 환경부장관 김명자
 노동부장관 이상용

○출석 정부위원

보건복지부차관 이종윤
 환경부차관 심영섭

【보고사항】

○의안 제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7일 김종위 의원 외 38인 발의)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안

(10월 27일 이용삼·이한동·서정화·이재창·

박종우·송훈석·이경재·이국현·홍문종 의원

외 200인 발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00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10월 27일 정부 제출)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의원(장영달) 윤리심사 요구의 건
(10월 27일 이부영 의원 외 131인 발의)
10월 28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8일 정부 제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대통령경호실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8일 정부 제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8일 정부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0월 28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의원(정형근) 징계 요구의 건
(10월 28일 박상천 의원 외 104인 발의)
10월 29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9일 정부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교통안전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9일 정부 제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개정법률안
(10월 29일 정부 제출)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9일 정부 제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0월 29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10월 29일 박상천·이부영·이금규 의원 외 288인으로부터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1월 1~2일 본회의에 국무총리·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의 출석을 요구)

휴회의 건

(10월 29일 의장 제의)
10월 30일(1일간)

○청원 제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9년 10월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19 한강탑오피스텔 703호 한국목욕업중앙회장 문진용 외 5인으로부터 조성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2건 1999년 10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로부터 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서천기능대학설립예산 배정에 관한 청원
(1999년 10월 27일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1동 43 서천기능대학유치위원회 공동대표 구격환, 노철래로부터 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10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
(1999년 10월 27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771-1 주공아파트 415-602 이상록 외 5073인으로부터 조홍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항공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1999년 10월 27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771-1 주공아파트 415-602 이상록 외 5073인으로부터 조홍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1999년 10월 27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771-1 주공아파트 415-602 이상록 외 5073인으로부터 조홍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서면답변서 제출

검찰의 영장 청구 현황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현황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감청과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4건 10월 25일 정부 제출)

공무원인사의 균형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10월 27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